

디지털 개방분과

공공데이터 활용한 시빅해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1. 국민 모두가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공공데이터를 통해 시빅해킹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노력 필요
2. 공공의 데이터는 공공이 생산하였으나 주인은 모든 국민
3. 데이터를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지만 주된 업무와 시간적인 제약, 동기 부여의 결여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에 대한 노력이 중단됨.
4. 단발성 해커톤이나 공모전 형식은 지속성이 떨어지며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

제안내용

1. 공간과 네트워크의 지원
2. 시빅해킹을 통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련 산업 종사자 네트워크
3. 시빅해킹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정부가 구매, 펀딩, 창업 지원 등
4. 시빅해킹을 위한 문제를 도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이디어를 위한 플랫폼(서비스) 신설

기대효과

1.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2. [‘18.01.16 제3차 국무회의]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의 실현
3. 공공데이터를 통한 사회 혁신과 행정업무 개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결국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어야 시빅해킹은 성공할 수 있음.

2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시민과의 소통·협력 강화

제안자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공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유경민, 박진혜, 안은숙

연락처: 044-205-2292, 044-205-2288, 044-205-2287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 필요
- 공공데이터 정책 과정에 시민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시민의 수요를 반영, 국민·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제안내용

- 신산업 촉진,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 * 제3차('20.~'22.)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6개 영역(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생활환경, 재난안전 영역), 46개 분야 데이터 개방

- 국민의 데이터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소통·협력체계 마련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AODP) 개최('20.8.)

- * 아시아 국가 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사례를 공유, 창의적인 해결사례를 선발·시상(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국민·스타트업 참가)

전국 6개 권역(서울·부산·강원·대전·대구·광주) ‘오픈스퀘어-D’ 운영

-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및 예비창업자 입주, 데이터 교육, 네트워킹, 컨설팅, 투자유치 설명회, 해커톤 개최 등 각종 지원

전문가·시민단체 등 민간주도의 ‘오픈데이터 포럼’(ODF) 운영

*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데이터 정책 관련 토론회 주제 선정, 세미나 개최

기대효과

○ 국민수요를 반영한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오픈데이터포럼 운영위원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 있음 (내용 :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3

전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어플리케이션 개발

분류

디지털 개방 / 참여·사회적가치

제안배경

지금까지 투표참여를 높이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투표율은 60% 정도(대선의 경우 70% 이상)에 그쳤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투표율을 더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투표의 한계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제안내용

현재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같은 경우 기술 개발, 도덕과 윤리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덜 이루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현재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은 어느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다. IT강국 코리아답게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투표의 가능성을 통해 전국민의 투표율을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대효과

공인인증서를 갖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선거에 더욱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정권의 정당성과 정권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바탕으로 한 투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은 블록체인과 클라우드를 통한 전자투표가 정착되기 전 시범운영의 사례로써 작용할 수 있다.

4

대민서비스 사용자 인증시 생체인증 도입

제안자

기관명: 공정위
담당자: 신호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연락처: 044-200-4284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전자서명법('99년)에 근거, 당초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된 공인인증서 사용으로 인한 액티브X설치 등 부작용 발생
- 행안부 및 과기정통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실천과제로 선정('17.8월)하여 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공인인증서 폐기 추진

제안내용

- 사건신고 등 사용자인증이 필요한 위원회 웹서비스에 스마트폰 기반 생체인식기술(FIDO*)을 적용한 개인인증 체계 도입

* FIDO(Fast Identity Online): 온라인 환경에서 ID, 비밀번호 없이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인인증을 수행하는 기술

- 사용자가 로그인시 휴대폰 앱에 등록된 생체정보를 통해 개인인증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기대효과

-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휴대폰 생체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공정위의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 확대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배경

- 이미 존재했으나 대중화되지 못한 디지털 기술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확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제안내용

- 특정 서류를 발급받거나 인증이 필요할 경우 현재는 관공서 방문이 필수적으로 요구
- 이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민원창구에 태블릿을 비치하여 영상통화 등의 방식으로 개인인증을 받고, 그에 따라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 대면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비대면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기대효과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또는 물리적으로 제약이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봄으로써 공공서비스 수혜계층 확대 도모

6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가-시민 교류의 채널 확장

분류

디지털 개방 /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제안배경

제안내용

모든 것이 디지털로 이루어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말고도 국가와 시민간의 교류 채널이 더 폭 넓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7

디지털 국회 활성화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법무부, 행정안전부

제안배경

최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만 선거를 하면서 정당으로 나뉘어 현 정부 평가에 기초한 투표가 이뤄졌으나 진정 지역경제나 지역 발전에 힘쓸만한 인재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여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지역민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국회를 출범하여 법안이나 국회에서 이뤄지는 토론이나 결정에 시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투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내용

디지털 공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국회와 같은 안건과 주요 이슈를 상정하여, 빅 데이터를 통해 진짜 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효과

최근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해서도 여론의 향방이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실명제로 국민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참여 환경 개선

제안자

기관명: 법제처
담당자: 안종선

부서명: 법제정보담당관실
연락처: 044-200-6787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최근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이 빠르고 정확하게 입법현황 및 입법예고를 개인 맞춤형으로 전달받고, 입법의견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제안내용

- 카카오톡 기반의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관심법령으로 등록한 법령의 입법정보를 상세하게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고,
-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웹페이지 이동 없이도 입법 내용을 확인하고,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입법 과정에 국민참여 편의를 확대

기대효과

- 최신의 ICT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법정보를 확인하고, 보다 편리하게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입법참여를 적극 지원

코로나 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구축 및 운용

제안자

기관명: 특허청
담당자: 차건숙

부서명: 정보시스템
연락처: 042-481-5159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이 빈발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 특허청은 디지털 특허정보 데이터 개방으로 코로나 19 백신·치료제,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의 가공된 특허정보 제공을 추진

제안내용

- (개방방법) 코로나 19 최신 특허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코로나 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구축 및 운영(붙임 참조)
- (개방내용) 코로나 19 방호·방역, 진단·검사, 치료제·백신 등 주요 기술분야 특허기술과 출원동향, 특허분석 보고서 등 공개
 - ① 코로나 19 적용 가능 치료·진단기술, 백신개발 등에 대한 특허 동향조사 리포트 및
 - ② 언론 등에 보도된 코로나 19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목록 및 기술내용을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방호/방역, 진단/검사, 치료제/백신 정보 내용>

방호/방역

- ① 마스크, ② 방호복, ③ 공기소독, ④ 신체소독
- ⑤ 방역관리시스템, ⑥ 기타 방역기술

☞ 마스크, 장갑, 보호복 등 각종 방호장비, 살균·소독제, 공공영역 소독, 방역시스템 등 광범위한 코로나19 대응기술 포함

진단/검사

① 검체분석기술 ② 열화상장치

치료제/백신

항바이러스 치료제

☞ 코로나 19에 적용 가능한 대안치료제로 알려진 항바이러스 치료제(간염, HIV, 신종플루, 에볼라 등) 관련 전세계 특허정보 포함

기대효과

◦ 객관적인 사실정보인 특허정보 제공으로,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가짜정보인 인포데믹에 대한 일반국민의 피해 예방 가능

* 코로나 19 관련 인포데믹으로는 ‘메탄올을 섭취하면 코로나 19 치료가 가능하다’, ‘치약으로 마스크를 세척할 수 있다’ 등이 있음

◦ 코로나 19 관련 최신 R&D 전문 특허정보 제공으로, 방역/방호, 진단/검사, 치료제 개발 전문가들에게는 신기술 개발 및 도입 등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상세 기초자료 제공 기능 수행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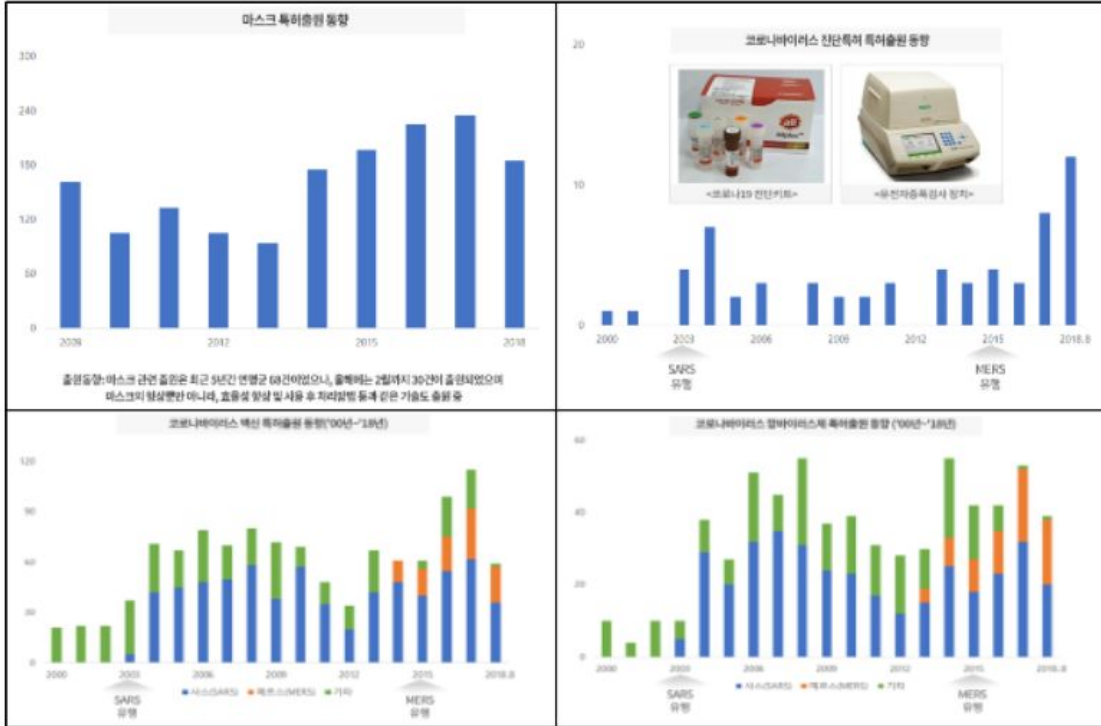
없음 있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붙임]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서비스 화면

□ 특허기술정보 제공 화면



□ 메인 화면



특허청
지식재산 혁신을 선도합니다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다 · 굿 · 특허서명, 제도개선, 특권영양사업

힘이
있으면
행이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큰 힘이 됩니다.

특허기술 동향을 알아줍니다.



치료·진단·방역 등
주요 특허기술 동향

세계 특허정보를 알아줍니다.



치료·진단·방역 등
특허기술 정보

자료·진단·방역 등
특허분석·
동향 보고서



도움말 드립니다.



피해 및 대응
지원 시책

이런생각 어때요?



국민생활·안전 관련
아이디어 제안

연구동향, 논문 등
코로나19
연구포털



디지털 혁신으로 투명한 유통사회 실현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제안배경

-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민 요구 품목에 대한 투명한 유통과정 공개 필요 (예. 코로나19로 시행된 마스크수급정보 공개)
- 투명하지 못한 유통분야가 일부 존재하며, 데이터 공개를 통해 선순환구조 개혁 필요

제안내용

- 목표: 디지털 혁신으로 투명한 유통사회 실현
- 내용: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유통과정 확보
 - 투명한 유통이 필요한 품목을 매년 일부 선정
 - (선정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참여율을 높임)
 - 선정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
 - 관계부처 선정 및 데이터 개방 적극 시행.

기대효과

- 데이터 개방을 통한 앱/웹 개발 및 다양한 창업 효과
 - 유통제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1차생산·제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불법·부당한 유통마진 감소
 - 이를 통한 국민생활 경제 향상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타/못한 얘기들
-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불법·부당한 유통이 근절되지 않음
 - 부동산 관련 자료는 민간기업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민간 및 정부기관간 사전 조율 및 법제화를 통해서 부동산정책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너무나 선량한 사람이어도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필요자료생성: 건설사정보, 아파트 설립 정보, 아파트 분양 정보, 공인중개사 정보, 아파트 판매 및 유통정보, 공시지가 정보, 매입자 정보 등, 아파트 분양 전 후 비용 관리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정보를 모두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자료 연계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및 온라인결제 시스템 구축·운영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담당자: 정다사름

부서명: 교통지도과
연락처: 062-360-7826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조회 및 온라인결제에 대한 행정정보시스템 부재로 납부 민원 발생
- 우리 구 개별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대민서비스의 일관성 부재

제안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및 온라인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스톱·무방문 납부로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시민편의 증진
 - 주정차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웹) 및 모바일(핸드폰) 구축
 - 주정차위반과태료 단속조회 및 납부시스템 연계
 - 행정안전부 「간단e납부(위택스)」, 국토교통부 「압류일괄해제 납부 시스템」, 광주은행 「가상계좌 납부」와 함께 신규 「온라인 전자결제」 추가 연계

기대효과

- 통화대기 없이 민원인이 직접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본인 확인을 통해 편리하게 주정차과태료 조회 및 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의견진술 가능
- 주정차 위반사항 및 단속장소 직접 확인 가능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전북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

제안자

기관명: 전라북도

담당자: 오의종

부서명: 토지정보과

연락처: 063-280-4384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기초행정구역(통·반)을 종이도면과 대지 중심의 조서로 관리하고 법정리와 행정리(통·반)의 경계를 혼용하여 사용
⇒ 종이도면 관리와 업데이트가 어렵고 전입신고나 직불금 조사 등의 행정업무 시 마을간 갈등이 발생
-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해 소규모 마을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 등의 사업추진 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발생
⇒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이나 각종 정책지원에 활용 할 수 있는 공간데이터나 통계자료 확보에 어려움

제안내용

- 전북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
(대상) 전라북도 14개 시군
(방법) 매년 2~3개 시군씩 연차별 추진('20~'24(5년))
(내용) 행정구역 통·반 약 24,177개, 자연마을 8,000여개
 - * 행정통·반과 자연마을 경계 DB구축
 - * 현황측량을 통해 DB 보완 및 공간정보 데이터 확정
 - * 도로명주소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규격 표준화
- 연차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MOU*(5개년)를 통해 사업추진
 -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체결
- 확정된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데이터 공개 및 제공, 활용

* 선거구 경계(통계청), 국가기초구역(행안부)과 연계하여 행정구역 조정 및 관리시스템 연계, 개발

기대효과

- 기초행정구역(통·반, 자연마을 등) 공간정보 데이터 확보·제공으로 소규모 마을 지원 및 주민 편의 도모, 경계지역 갈등 소지 사전차단
- 각종 정책 수립·추진에 명확한 공간정보 활용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및 전산화로 행정구역 효율적 관리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담당자: 염경환

부서명: 인공지능정책과

연락처: 062-613-1211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침체되고 있는 지역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인공지능 개발 인프라를 집약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시급
 - 미국·중국·독일 등 선도국들은 AI 육성에 대한 유례없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국가 차원의 총력을 집결 중
- 인공지능 중심 지역 거점 구축과 AI 산업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자립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제안내용

- AI중심 산업혁신 생태계를 위한 인프라 조성
 - AI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벤처·스타트업 입주 공간, AI 특화 첨단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특화 인프라 구축
-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등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 기업 협업 기반 AI융합(AI+X) R&D 추진을 통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기술 분야 창업 촉진
- 일자리 창출형 창업·혁신 지원
 - AI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신속한 성장시스템 구축, 사업화용 데이터 확보·제공을 통해 AI 특화형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기대효과

-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광주지역의 주력 산업에 AI를 활용하여 생산과정 최적화, 제품 혁신, 비용 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
 - 지역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역 기반 AI 활용 서비스 촉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 인공지능 분야 투자 저조, 기술력 취약* 등으로 주요국 대비 뒤쳐져 있는 국내 인공지능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 인공지능 분야 기술수준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순이며, 미국과 기술 격차는 1.8년 / AI 융합서비스 수준(비즈니스 모델)은 해외 40.2%, 국내 9.8%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납세도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규모 수입업체 법규준수 자율점검

제안자

기관명: 관세청
담당자: 김준형

부서명: 법인심사과
연락처: 042-481-7986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영세·중소 수입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수입신고 적정성, 관세혜택에 대한 점검 능력과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 부족
- 관세청은 납세도움정보시스템을 구축(19년)하여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였으나, 소규모 수입업체의 활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오류사항 분석이 어렵다는 호소

<납세도움정보 시스템이란?>

- ① 기업별 법령(유권)해석, 세법개정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 ②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 ③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기 등 「절세 Tip」 제공

제안내용

- 전체 기업에 대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진단 실시 및 결과 제공
 - 기업 요청에 따라 세관직원의 분석결과를 더해 심층적으로 분석·점검하는 세부진단서비스 제공
- 전국 본부세관에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활용·상담창구 설치

기대효과

- 중소 규모 수입업체의 납세도움정보시스템 활용을 지원하여 업체의 법규준수 자율점검 역량 제고
- 관세청 보유 데이터 개방을 계기로 기업의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확산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모바일 고지·납부·안내 서비스 확충

제안자

기관명: 국세청

부서명: 정보화2.3과징세과

담당자: 정숙희 사무관, 박현주 사무관, 이동현 사무관

연락처: 044-204-2512, 044-204-2552, 044-204-3037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국세안내문 등을 종이 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막대한 우편비용이 소요되고, 각종 안내문의 송달지연 및 반송문제 발생
- 모바일을 활용하여 고지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
- 최근 모바일 결제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로 납세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여 납부편의를 제고할 필요

제안내용

-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로 안내문 등을 모바일로 송달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일반우편 안내문 일부를 문자 등으로 발송)
- 국세 안내문·고지서 등을 PUSH 알림으로 제공
- 가입자가 많은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 확대

기대효과

- 모바일 안내문 송달로 우편 송달이 힘든 납세자에게 송달이 지연·반송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우편송달 비용 절감 가능

- 모바일 고지. 안내 PUSH 알림 제공으로 납세자가 적시에 정보 확인
-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국세납부 건수 증가로 납세자 편의 증가
-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납부를 통한 종이 사용량 감소로 환경 보호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데이터 기반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

제안자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담당자: 송형민

부서명: 디지털융합과

연락처: 064-710-2584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과학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보유하지 못한 민간 빅데이터 확보 및 수집으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책에 반영 여건 마련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용이하게 접근하게 하여 경제시장을 예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

제안내용

- ①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 빅데이터 실무협의회,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을 통해 상세 과제 도출
ex) 공영주차장 최적 위치 도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분석 등
 - 과제별 재사용 가능한 분석모델 개발
- ② 민간 빅데이터 구매
 - 행정서비스 수요 인구 파악을 위한 통신사 생활인구 데이터 구매
 - 각종 이슈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 및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을 위한 신용카드 빅데이터 구매

기대효과

- 공공기관에서 민간 빅데이터를 구매하여 공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및 데이터화를 통해 민간에 개방하여 지역의 트렌드에 민감한 소상공인, 벤처청년기업인, 관광업계 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담당자: 김주현

부서명: 회계정보과
연락처:

제안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정책 제공 가능
 - 우리구 및 각종 데이터(공공유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양한 행정수요 예측 및 구민 맞춤형 정책 제공 기대

제안내용

- 분야별 메타데이터 구축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
 -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데이터 표준화
 - * 메타데이터: 공공DB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
 - * 표준화: 코드, 용어, 데이터 도메인, 메타데이터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DB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
- 빅데이터 플랫폼 내 분석시각화리포트 서비스 제공
-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지도 서비스 제공
- 부서별 현안 분석과제 발굴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마련

기대효과

- 데이터 자동연계 수집으로 데이터 정제처리분석 시간 단축
- 민원, 복지, 환경,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다양한 업무 분야의 공공서비스 개선
- 실무부서에서 바로 분석활용 가능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 전 부서 분석 결과 공유로 유사 사업 방지

공공부문 간 데이터 연계·분석, 정부-민간 간 정보공유 확대

제안자

기관명: 광산구
담당자: 진범석

부서명: 데이터정보과
연락처: 062-960-6843

제안배경

- 공공부문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및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 증가
-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적극 개방 및 품질 강화 필요
- 공공데이터 객관적 분석 및 직관성 높은 시각화 기반 마련

제안내용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한 기관 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 내·외부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연계로 데이터의 품질 개선 및 분석 정확도 향상
-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분석결과 시각화(차트, 그래프, 지도 등) 제공

기대효과

- 다양한 데이터 공개로 시민 만족도 상승
-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각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

빅데이터와 GIS기반의 해양사고 원인 분석 및 데이터 공개

제안자

기관명: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서명:해사안전관리과/해양교통빅데이터실
담당자 신창호/신대섭
연락처 044-200-5868/044-330-2344

제안배경

- 교통시스템 중 유일하게 사고 및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해양교통의 안전성 제고 필요
-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서비스와 해양사고 예방, 정책효과 증진을 위해 해양사고의 근본적 원인분석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해양사고 데이터의 공개 필요

제안내용

- (통합 저장소 구축) 분산되어 운영 중인 해양사고 관련된 데이터(항적, 사고, 검사, 보험 등)를 해양안전 빅데이터로 통합
- (GIS 기반 해양사고 원인 분석) 해구단위(단위구역) 항적, 기상, 사고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GIS기반의 해양사고 원인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해양사고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 (해양안전지수 개발 및 데이터 공개) 해상교통량, 교통사고빈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해양안전지수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안전 데이터를 개방하여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지원

기대효과

- 해양교통부문 통합 저장소의 융복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대적 비교·평가가 가능한 객관적인 국가 표준 해양교통안전지수 개발 및 해양사고 저감 및 효과적인 안전정책 추진

- 교통량과 인명 및 대물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해양사고취약구간 선별, 해양 안전성 평가 및 개선사업 수행
- 해양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해양 분야 각종 연구·개발 활성화
- 해양교통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해운경제 활성화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내용 :)

판결문 오픈데이터 형태로 전면 공개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법무부(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담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배경

- 공약의 추진배경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을 통해 검색가능한 판결은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1,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형사판결서 임의어 검색이 허용되고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검색·열람 대상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고 이마저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의 경우 월 평균 확정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 건수가 2018년에 비해 약 2배, 2017년에 비해 약 4배 정도 증가하여 판결문 공개에 대한 수요가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약의 필요성

'판결정보 특별열람' 서비스도 있지만, 법원도서관에 직접 찾아가 1시간 30분동안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종이와 펜만 사용해 선고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은 후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는 4대에 그쳐, 예약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 내부 인적 네트워크에 친분이 있는 일부 법조인들만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구할 수 있어 판결문 입수 단계에서부터 전관예우가 성행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변론 준비나 학술연구를 위해서는 수십건에 이르는 판결문 확인이 필요함에도, 판결문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약에 따른 긍정적 효과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합니다.

사법절차의 투명화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모든 판결문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픈데이터 형태로 전면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내용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이하 “사법발전위원회”)와 판결문 공개 범위와 수준을 논의하는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가. 판결문 공개의 범위와 방식을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오픈데이터포럼 등 데이터관련 민관협력기구와 함께 논의

나. 협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은 사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 OGP포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여 시행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연구반의 연구결과 및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판결문 공개 확대 관련 법안 등을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판결문 공개 정책을 논의

가. 협의체 구성 후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연구반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판결문 공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함

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판결문의 데이터화 방식에 대한 데이터 전문가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

다. 협의체의 논의과정에 협의체 구성원 외 일반 시민이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사항을 적시에 공개하여 투명한 의사결정 담보

사법발전위원회는 협의체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판결문 공개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

기대효과

본 공약은 사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법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의 연구 뿐 아니라 일반 시민, 변호사 등 이용자의 입장까지 반영한 판결문 공개 정책을 도출하여 정책의 공동생산(co-creation)의 모범사례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

헌법 제109조의 현실화 및 사법절차 투명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며 고급 정보(데이터)로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데이터 개방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1. 재난은 대비해야 하는 것이며, 알아야 대비할 수 있음.
2. 국민 모두는 국민 안전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있음
3. 국민 안전과 관련된 통합 창구가 미비하며 관련 데이터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4. 행안부 산하에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으나 이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정보에 대한 통합 창구가 없는 실정임
5. 현재 국민재난안전 포털, 안전보건공단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단방향의 정보 제공에 머물러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개방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제안내용

1. 국민 안전 관련 각 부처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계하고 통합 창구를 통해 전면 개방 (민간/공공 시설물 안전정보(교량, 건물 등), 가스시설 안전정보, 소방시설 안전정보, 먹거리 안전정보, 교통관련 안전정보, 환경관련 안전정보, 가축 등의 전염병 정보 등 , 추가적으로 여행 안전정보, 산림 안전정보 등)
2. 예시 - 어느 건물의 시설물 안전 등급이 어떠한지? 어느 위치에 특정 교통안전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진단은 언제 몇 등급을 받았는지?, 무엇을 먹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기대효과

1. 국민 안전 정보는 국민에게 다가오는 체감이 크며, 데이터를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음
2. 관련 산업에서 재난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음
3. 안전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

실용성 있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관 업무 및 교육 협업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배경

- 추진배경: 공공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 산업에서의 활용과 교육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개방 및 즉시 활용, 공공에서 개방하려는 데이터를 민간의 필요가 아닌 공공에서 추리는 경우 필요와 수요의 간극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한계, 데이터/인공지능 관련 교육에서는 쓸만한 데이터의 부재로 교육과 실무간 괴리가 존재.
- 필요성: 코로나19에서의 시빅해킹을 통한 전국민에 대한 정보 효용성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적 영역 발굴 및 정부의 데이터/디지털 활용 의지 공개
- 수혜대상: 공공정보가 필요한 국민, 데이터의 활용한계가 궁극한 공무원, 데이터를 가지고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인

제안내용

- 목표
 -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 중 비밀유지가 필요없는 데이터의 우선순위 공개
 - 데이터의 활용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산업에서의 활용이 아닌 교육과 시빅해킹으로의 즉각 활용 유도
- 주요내용
 - 공공에서 개방가능한 데이터의 목록 및 가능범위 공개
 - 공공의 주도로 진행되는 데이터/인공지능 교육에서의 데이터 활용, 시빅해킹으로서의 공공목적 서비스 개발
- 실천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에서 부처별 개방가능한 데이터의 목록과 가능범위를 공개한다.
- OGP KOREA 디지털과개방 분과를 중심으로 데이터 공개 위원회를 꾸린다.
- 데이터 공개 위원회에서 데이터의 효용성, 활용성, 즉시성 등의 기준으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
- 부처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공데이터 포털 및 OGP KOREA 가 제작한 플랫폼에 업로드한다.
- 데이터는 로우데이터가 아닌 api 형태로 접속하고 주고받기 좋은 형태로 제공한다.
-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 즉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교육에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교육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장려할 장치를 마련한다.
- 1년에 두번은 데이터 공개 위원회에서 선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커톤을 주최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 해커톤 등의 행사와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수집한 의견을 기반으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관련 부처와 단계적으로 협의한다.

기대효과

1. 공공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좋은 프로젝트, 서비스가 나오면 그 자체로 데이터 개방의 동기를 강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데이터 개방을 크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함으로서, 부처의 부담을 축소하고 민간의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
3. 눈 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가져옴으로써, 정부 주도의 데이터 개방이 실용적이고, 활용성이 높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체감가능하게 알릴 수 있다.
4. 디지털 전환 및 개방에 대한 어젠다를 컨셉 단위가 아닌 실행 가능한 요소 단위로 분해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시민과의 소통·협력 강화

제안자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공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유경민 / 박진혜 / 안은숙

연락처 044-205-2292 / 044-205-2288 / 044-205-2287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 필요
- 공공데이터 정책 과정에 시민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시민의 수요를 반영, 국민·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제안내용

- 신산업 촉진,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 * 제3차('20.~'22.)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6개 영역(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생활환경, 재난안전 영역), 46개 분야 데이터 개방

- 국민의 데이터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소통·협력체계 마련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AODP) 개최('20.8.)

- * 아시아 국가 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사례를 공유, 창의적인 해결사례를 선발·시상(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국민·스타트업 참가)

- 전국 6개 권역(서울·부산·강원·대전·대구·광주) ‘오픈스퀘어-D’ 운영

-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및 예비창업자 입주, 데이터 교육, 네트워킹, 컨설팅, 투자유치 설명회, 해커톤 개최 등 각종 지원

- 전문가·시민단체 등 민간주도의 ‘오픈데이터 포럼’(ODF) 운영

- *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데이터 정책 관련 토론 주제 선정, 세미나 개최

기대효과

- 국민수요를 반영한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있음 (내용 :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제안자

기관명: 해양경찰청
담당자: 이지혜 사무관

부서명: 정보통신과
연락처: 032-835-2583

분류

디지털 개방 (국민 관심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통합 공개 시스템 구축 등)

제안배경

○ 해양분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가공, 개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제안내용

- 국민(수요자) 중심 데이터 개방 및 융합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 '19년 선박출입항 관련 데이터 개방을 중점으로 추진, '20년 해양안전, 수상레저 등 분야별 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융합) 개방된 데이터들을 융합하여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지역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
 (데이터 융합) 기 개방된 데이터와 민간데이터(통신·카드사 등)를 융합하여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지역 및 위험지수 등 데이터 개방
- 데이터 간 연계·분석을 통해 행정서비스 개선
 - ① 데이터통합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데이터 생태계 조성
 - ② 해양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마련을 위해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 ③ 통합저장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시범과제 수립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기반 강화
 -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선계획*"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안' 마련
 - * 정보(데이터)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폐기 시까지 데이터 생애주기별 관리
 - 직원들의 공공데이터 이해와 분석을 위해 교육확대

기대효과

-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률 증가

초연결 5G 시대,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강화 관리체계 확립

제안자

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담당자: 박영민, 황태욱

부서명: 경영혁신팀,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연락처: 061-350-1302, 1602

분류

디지털 개방 / 참여·사회적가치

제안배경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시대 도래로 생활환경 속에서 전파를 활용한 기기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파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필요성) 과거 이동통신 무선국 중심의 전자파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생활주변의 IoT 등 무선 이용 단말기 급증으로 국민의 불안감 증폭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 관리체계 필요

※ 수혜대상 : 전국민(다중이용시설, 주거·사무 생활공간,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제안내용

- (사람 중심의 전파이용환경 구축) 생활환경 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으로 측정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갈등 예방·조정 등을 추진
-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조사·평가체계 구축) 전자파 측정·관리지역을 무선국 중심에서 생활공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영·유아 시설뿐만 아니라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측정·평가·공개 범위 확대
- (개방형 소통·갈등 조정 강화) 시민단체, 법조계, 의·공학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파시민참여단과 전자파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파 저감 컨설팅 확대, 이해관계자 갈등예방 등 전자파 안전 관리역할 강화

기대효과

- (국민안전 체감도 증대) 생활환경 주변의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로 국민의 전자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구축
- (무상측정으로 국민부담 완화) 국민이 신청한 전자파 측정비용, 저감 컨설팅 등의 비용을 전액 면제하여 수수료 부담 해소
- (관련 산업 활성화) IoT 기반 전자파 측정장비에 미세먼지 및 AI 스피커 등의 기능 등 혁신기술 접목으로 관련 산업 촉진 및 신규시장 창출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전자파시민참여단)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 있음 (내용 : 설치·운영계획 및 설치대상 선정 등 검토)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분류

디지털 개방 / 참여와 사회적 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제안배경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하고, 예산관련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주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 이러한 지방의회 활동은 모든 국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지방의회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개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없는 정보의 경우 각 지방의회별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정보격차 발생.
- 또한 243개 지방의회 홈페이지마다 공개항목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지방의회 의정활동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편한 접근성으로 인해 지방의정활동이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음.
- 이에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공개하는 자료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제안내용

- ▷ 전국 지방의회 홈페이지(243개)에서 각각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한다.
- ▷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될 필수 항목 설정
 - 의정활동내역: 회의록, 회기일정, 의원별 의회 출석현황, 해외의정연수 계획 및 보고서, 간담회 및 토론회 현황, 입법 및 정책개발 보고서 등
 - 의원 행동 강령 관련: 의원 겸직 현황, 의원 징계현황,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 각 지방의회 사무처: 해당의회 의정활동 정보 업로드
 - 주무부처(행정안전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유지 관리, 각 지방의회 사무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 메뉴얼 제작 및 배포, 대국민 홍보 진행
- ▷ 기타
 - 현재 2021년 국민참여예산에 사업제안으로 등록되어 있음(접수번호4207)

-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음

(https://www.mybudget.go.kr/howslitPrclsng/bsnsPropseSttusDetail?rcept_year=2020&bsnsPropseIndx=4207&searchOrder=ALL&searchState2=&debate_no=&searchVal=%EC%A7%80%EB%B0%A9%EC%9D%98%ED%9A%8C&searchSDate=2021&in_year=&searchCate=&searchDel=&searchType=&listSize=10&searchKind2=2&searchState=&bmt_idx=1&page=1&pd_se=&searchEDate=&branch=&searchKind=title&searchCateSub=)

기대효과

-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의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허브로, 불투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전환
- 통합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
- 지방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비정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정보제공자 역할 가능
- 전국 의정활동 정보공유를 통해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의원 관련 비위 방지

회의정보공개 강화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안배경

- 한국 공공기관의 경우 회의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의사과정 중에 있는 정보' 또는 회의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들의 '개인정보' 혹은 공개될 경우 회의 중 '자유로운 의사진행'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사전공표정보에도 포함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음.
-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과 주의 회의공개법에 따라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회의의 공고와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16년 열린정부파트너십을 통해 회의공개를 위한 절차로 위원회 회의공개체계를 재편해 회의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 바가 있음.

제안내용

- 주요 공공기관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주요회의(노동/환경/안전/복지 분야 등)에 대해 시민들이 방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도록 하는 회의공개체계 마련
-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들 중 관련법에 따라 명단 및 회의록 공개가 불가능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위원명단과 회의록 공개
-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 상의 회의록 작성양식으로는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회의록작성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 내용상 세부사항들을 추가하여 작성기준의 강화가 필요함

기대효과

- 하와이 주정부 경우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기도 함.
- 한국 정부 역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함.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공개를 추진하고 전체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공개체계를 개편해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를 신속히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함.

정보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포털의 광역지자체 단위로 운영

분류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정보공개부서)

제안배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정보공개법상 생산목록 뿐만 아니라 접수문서목록도 공개하도록되어 있으나 접수문서목록은 미 공개로 운영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는 시스템의 부하 등으로 이를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임
- 현 중앙부처가 통합하여 관리하는데 인적 물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정보공개포털을 중앙과 광역으로 분산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가 필요함

제안내용

□ 목표

- 국민 알권리의 기초 정보인 정보목록의 100% 공개

□ 주요 내용 및 실천 방법

- 접수문서 목록의 공개
- 정보목록 관리의 분산화
 - 중앙부처시스템 : 중앙부처 및 그 산하기관의 정보목록의 관리

- 광역시스템 :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정보목록의 관리
- 교육기관 : 교육청, 교육기관 및 그 산하기관의 정보목록의 관리
- 정보공개청구는 단일화
 - 현행대로 청구처리는 공보공개포털에 처리

기대효과

- 기관의 정보공개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책임행정 역량강화
- 생산문서와 접수문서의 100% 공개를 통하여 행정 행위의 선후관계의 파악으로 행정의 투명성 강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시민의 행정감시 역량강화

정책 실명제 보완을 통한 정책 민주성 향상

제안 배경

정책 실명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 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 사업개요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정책 실명제 강화'에 대한 공약으로 정책 실명제 운영에 관한 내용과 공약 활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해보았다.

그러나 관련 모니터링 결과, 잘 이행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몇 가지 보완 요소가 존재했다. 먼저, 비공개 되어있는 자료의 경우 비공개 사유가 기재되어있지 않다. 둘째, 정책 실명 공개 과정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인 국민 신청 실명제의 경우 분기별로 한달 동안 접수를 받으며,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책 실명제와 국민 신청 실명제 모두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다. 해당 분야에 대한 각각의 보완을 통해 정책 실명제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책임성, 참여 접근성 등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민주성 향상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제안 내용

주요 내용, 실천 방법:

- 정책 실명제 자료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
 - 정책 실명제 운영 지침 관련 자료가 비공개인 경우, 비공개 사유 명시
 - 비공개 기준 장벽 완화를 통한 정보 공개의 유연성 제고. 이를 통한 접근성 개선
 - 중점과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선택적 명시 -> 필수 명시를 통한 선정 근거의 투명성 강화
- 국민 신청 실명제의 상시 신청을 통한 개방성 강화
 - 분기별 신청에서 상시 신청으로의 전환 필요
 - 정보공개청구와 같이 수시 신청과 확인을 통한 정책 공개의 접근성과 적시성 개선

- '광화문 1번가' 이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한 국민 신청 참여 수단 확보 -> 접근성 개선

• 정책 실명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책임성 강화

- 분기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담당자의 정책 실명제에 대한 책임성 고취. 평가 우수 선정 기관에 보상 지급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 실명제 실현 동기 제공
- 자체 평가 이외에도 외부 평가(ex. 국민 평가)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 방향성 모색
- 국민 신청 실명제의 경우 해당 자료의 심의 결과 및 과정을 공시.

• 정책 실명제의 홍보 확대를 통한 참여 접근성 강화

- 보도자료, SNS 홍보 이외에도 모니터링단 및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 활동 전개
- 국민 신청 실명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기대 효과

• 국민들에게 정책 정보의 투명성 제공

- 정책 사업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증진
- 정부 정책의 개방성과 투명성 증진 기대

•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 관계자의 책임성 증진

- 철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정책 사업 관계자의 책임성 향상 기대
- 내·외부적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한 올바른 정책 방향성 제공

•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과정의 피드백 강화 및 참여 접근성 증진

- 시민의 참여 접근 장벽 완화 및 정책에서의 거버넌스 실현
-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실현 활성화 -> 참여 민주주의 및 열린 정부 실현
- 공급자 중심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정책 형성 -> 정책의 민주성 향상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식품 영양·기능성분 데이터 확대

제안자

기관명: 농촌진흥청
담당자: 유선미

부서명: 식생활영양과
연락처: 063-238-3560

분류

디지털 개방 / 참여·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추진배경) 식품섭취와 건강의 상호관계 규명 확대에 따라 국민의 사전예방적인 질병관리 측면에서 식품 성분 데이터 확보 제공은 중요
 - 선천성 또는 만성 질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식품성분 요구 증가
- (필요성) 최근 데이터 기반 4차산업혁명기술과 접목한 영양 및 식품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식품 영양·기능성 성분 데이터 확대 필수
 - 우리나라 130성분, 미국 150성분, 호주 256성분 공개
 - * 세계적으로 식품영양성분 기반 특수목적형 식품/식사 제조시장 급성장
 - 의료용 식품 세계시장규모 : ('15) \$ 123억 → ('22p) \$ 210.7억 (출처 : Grand view research)

제안내용

- (목표) 최신 국가식품성분 DB 및 희귀질환자를 위한 특수성분 DB 공개
- (내용) 국내 식품소비 환경에 맞는 식품성분 데이터 확보 및 공개

- 국민 주요 섭취 식품 대상 식품성분 분석, DB 구축 및 공개: 매년
 - * (~'22) 국민 주요 섭취 식품 분석 : 350점, 130성분
- 기능성분 등 특수성분 분석, DB 구축 및 공개
 - * 영양대사 희귀질환자를 위한 목적형 DB : ('22) 갈락토스
 - * 기능성분 : ('19) 2종 → ('21) 사포닌 등 3종 → ('21) 사포닌 등 3종
- (방법) 농식품 올바로(<http://koreanfood.rda.go.kr>)을 통한 DB 제공 및 검색 서비스

기대효과

- (국민) 식품정보 습득 편의성 제고, 자기 주도형 식생활 관리로 건강 증진
- (산업체) 영양, 식품, 보건산업 분야 질적 제고, 신산업 창출
- (농업)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신소득 창출
- (학계) 식품, 영양, 건강 관련 기작 규명 등 학술적 성과 제고
-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 적정 영양 공급을 위한 식품수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 국민영양섭취기준(DRI)설정 및 식생활 지침 수립
 교육부, 법무부 등 : 대상별 영양관리 정책 수립

선택사항

-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자문위원회)
-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내용 : 성분 분석, 공개범위, 데이터 처리 방법 등)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직구 거래, 먼저 다가가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

제안배경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로 해외직구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2123만 건, 15억 8천만 불로 작년 대비 건수 기준 42%, 금액 기준 20%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증가세를 이끈 주요 요인은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으로 19년 상반기에 373만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3%나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직구족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외직구 의약품은 제조국, 판매국, 발송국 등이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하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오·남용 및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에서 불법 의약품들을 단속하고 관리해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현행 관세법상 US 150달러 이하, 총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 즉 소액 소량의 약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를 면제해준다. 판매국 기준으로 일반의약품과 식이보충제로 분류되어 국내에서는 의사처방전 없이 구입 할 수 없는 제품도 해외직구로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만 있고 온라인 마켓 등 중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문제도 크다. 국내에서 금지된 의약품이지만 국내 대형 온라인 마켓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은 여전히 불법 유통 의약 제품에 노출 되는 것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언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노출될지 모르는 의약품에 더욱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대한 불법 의약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외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설명과 후기만 보고 구매하던 소비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일차적으로 위해식품정보에 관해 알려주고 구매 전 한 번 더 위해식품정보 확인 과정을 통해 더욱 안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식품안전나라가 지닌 유용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무분별한 오남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

제안내용

제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및 앱 접근성 확대
2. 국내 대형 온라인마켓(쿠팡, 지마켓, 인터파크 등)과 협업으로 건전한 소비 유도
3. 전자상거래법- 해외직구 상품 판매자, 구매자, 중개업자 책임
4. 식품 유통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협업 및 정보공유

주요 내용, 실천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및 앱 접근성 확대
 -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정보 중 검출성분에 대한 한글 설명 필요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전문용어를 쉽게 변환
 - 앱 홍보 필요 (분야는 다르지만 화장품의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화장품을 사기전 성분 확인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 화해앱처럼 해외직구하기 전에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 국내 대형 온라인 마켓(쿠팡, 지마켓, 인터파크 등)과 협업으로 건전한 소비 유도
 - 온라인 마켓 해외직구 카테고리 상단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위해정보목록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 배너, 이동메뉴 등 제작
 - 온라인 마켓 해외직구 결제 및 구매단계에서 상품에 대한 경고문 및 안내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

예시 문구) 이 상품은 해외배송 상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목록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세요/ 이 상품은 해외배송 상품으로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목록에서 확인과정을 진행해야합니다. 등
- 전자상거래법- 해외직구 상품 판매자, 구매자, 중개업자 책임
 - 기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있을 뿐, 대형온라인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유통에 일조하는 중개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개정
- 식품 유통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협업 및 데이터 공유
 - 수출입물품의 통관관리를 하는 관세청, 국내외 식품과 의약품 관련 방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식약처, 동식물 사용해 만든 의약품을 관리하는 산림청 등 의약품의 관리 및 유통과 관련있는 부처간 협업으로 필요한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결합
 - 불법 의약품들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 확대

기대효과

-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소비 유도
- 민간기업과의 협업으로 국민들에게 식품안전 관련 가치창출
- 의약품 유통의 단계화
- 공공·민간 협력으로 다각도 접근 가능
- 부처간 데이터 결합으로 새로운 정보 생산 가능

수산관계법령위반 사건처리건의 및 사건지휘일자 등 알리미 서비스 제공

제안자

기관명: 서해어업관리단
담당자: 조대기 주무관

부서명: 무궁화11호
연락처: 010-2556-6291

분류

디지털 개방 / 참여·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추진배경
 - 수산관계법령 위반사건 현장처리 시 피의자들의 추후 사건처리 진행경과에 대한 문의 및 궁금증 해소
 - 현재 사건처리신호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상의 특성상 피의자가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국가어업지도선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대국민 최상의 봉사과 행정서비스 제공 실현으로 기관 이미지 제고

제안내용

- 주요내용
수산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해 출동 종료 후 해당사건건의 및 지휘완료일자 등 진행경과를 피의자와 공유(알리미 서비스)
- 실천방법
 - 1차) 출동종료에 따른 입항 후 해당사건 관계기관 사건건의완료 시 문자송부
 - 2차) 사건지휘완료* 확인 후 피의자에게 지휘일자, 위반사항 등 2차문자 송부
 - * 피의자통보 前 지휘(가, 부)확인
 - 이 후 진행경과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 中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사건처리 일체 진행경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만족도·투명성 향상
- 국민이 찾기 전 정보제공으로 열린정부 실현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내용 :)

정부 공지자료의 기계접근성 강화를 위한 평가 체계 만들기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제안배경

정부와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십수개씩 각종 공고가 올라옵니다. 공지사항부터 보도자료, 각종 사업공모(지원, 입찰, 용역, 구매 등)까지 내용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게시판의 해당 글에 들어간 뒤 첨부로 되어 있는 HWP 파일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고형태는 요즘같은 ICT 기술 시대에 맞지 않는 매우 비효율적인 정보전달 방식입니다. 일단 정보를 찾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파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공고를 찾아봐야 한다면 언젠가 올라오는지 모르는 상황이면 불편은 훨씬 커집니다.

사업의 담당자 역시 내용을 홍보하기 불편합니다.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해당 게시판 링크나 파일을 직접 메일 등에 담아서 뿌려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개씩 올라오는 각종 뉴스정보들은 모두 검색 포털에서 몇자만 치면 되는 세상인데, 정부의 공고를 두고 왜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현재 정보 제공 방식은 기계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 있어도 검색 프로그램은 내용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의 문제는 앞서 말한 불편함도 있지만 정보 전달의 불평등과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디에 올라오는지 사전 정보가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어떤 공모나 지원 사업이 있을 때 몰라서 지원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고에 대한 기계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민간에서 만든 수많은 검색 프로그램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서, 그 효과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찾고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안내용

현재 HWP 파일을 게시판 형태로 공유하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를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며 기관마다 변화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공지자료의 기계접근성 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행 단계를 정한 다음, 이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담당하는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기계접근성이라는 것이 결국 민간을 위한 것이고 민간에서 쓰는 기술 중심이므로, 목표를 세우고 평가하며 점검하는 자리에는 민간도 참석해야 합니다.

문서를 올리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쓰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환이 안되고 폐쇄적인 HWP를 쓰지 않는 것이 최종 목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신 문서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에는 표준을 만들면 좋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한다면 담당부처, 분야, 사업명, 금액, 모집 시작일, 모집 마감일, 담당자 연락처 등 공통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분량, 순서, 표기 방식 등을 통일하면 훨씬 접근하기 좋은 자료가 됩니다.

정부 공지자료의 기계접근성 강화를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중요 목표로 정하고, OGP 스케줄인 2년과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기대효과

일단 검색프로그램이나 더 나아가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면, 실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민간 서비스들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노년층에게 필요한 정보나 사업들이 나왔을 때,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정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불평등과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이나 정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추적과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기타/못한 얘기들

내부 문서부터 HWP 로 만드는 환경에서 공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내부 문서 작성 환경을 같이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마 연수원에서 문서작성 가르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할겁니다. 최종 목표에는 이런 부분도 권고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화이트해커 양성 및 개방 정보 공개안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제안배경

코로나 발병 시, 신천지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소속 단체의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발병률이 높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 중학생 해커 등이 해킹을 통해 주소록을 공개한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부분에 착안하여 정부에서 화이트 해커를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다수 국민의 건강,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해킹을 통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안내용

1. 목표: 국민의 건강이나 권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실천 방안: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 정부에서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여 공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줌

기대효과

코로나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도박, 성매매 등 온라인에서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빠른 대처 및 예방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서24 이용 활성화

제안자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자: 박선

부서명: 정보공개정책과
연락처: 044-205-2273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문서24’란, 국민, 기업, 단체에서 집,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open.gdoc.go.kr)으로 공공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그간 국민은 공문서 제출을 위해 종이문서를 작성 후 기관 방문 및 우편발송, 팩스 등으로 시간과 비용(교통비, 우편수수료 등)을 소요하였으나, ‘문서24’를 통해 이를 개선함
-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국민, 기업, 단체 등 공문을 제출하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온라인 공문 접수, 처리를 통해 종이문서 감축, 일하는 방식 등 개선이 가능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

제안내용

- 국민의 공공기관에 공문서 제출방식을 온라인으로 확대
 - 기존 기관방문,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문 제출방식을 인터넷(‘문서24’)으로도 제출 가능
- 국민과 공공기관 간 양방향의 공문서 유통체계
 - 국민은 ‘문서24’ 사이트에 접속하여 2,600여개 공공기관으로 공문서를 보낼수 있고, 또한 기관의 회신공문(처리결과)도 확인 가능
- ‘문서24’ 내 국민의 공문제출 이용편의를 위한 온라인 웹서식 제공
 - 공문제출 시 필요한 서식파일을 손쉽게 검색,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가능
- 안정적이고 편리한 ‘문서24’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운영
 - ID기반의 간편인증방식,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 및 다양한 보안솔루션, 암호화 문서 유통 등의 시스템 보안 강화 조치 등
- ‘문서24’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 기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방식 등으로 국민, 공무원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기대효과

- 서비스 활성화로 종이문서 감축 및 공문제출 이용편의 향상 등으로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공문 제출을 위해 종이문서 인쇄, 기관 방문 등의 교통비, 우편발송 시 수수료 등 절감 가능
 - 국민은 부담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공문을 제출 가능

공공부문 간 데이터 연계·분석, 정부-민간 간 정보공유 확대

제안자

기관명: 광산구
담당자: 진범석

부서명: 데이터정보과
연락처: 062-960-6843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공공부문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및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 증가
-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적극 개방 및 품질 강화 필요
- 공공데이터 객관적 분석 및 직관성 높은 시각화 기반 마련

제안내용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한 기관 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 내·외부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연계로 데이터의 품질 개선 및 분석 정확도 향상
-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분석결과 시각화(차트, 그래프, 지도 등) 제공

기대효과

- 다양한 데이터 공개로 시민 만족도 상승
-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각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

5G 시대 실감콘텐츠 문화유산 개방

제안자

기관명: 문화재청
담당자: 강현수사무관

부서명: 문화유산교육팀
연락처: 042-481-3152

분류

디지털 개방 / 참여·사회적가치

제안배경

(추진배경) 5G 시대 문화유산의 고품격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 개방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문화유산 서비스*를 제공

* 세계유산, 국가지정문화재, 오지의 문화유산, 명승지, 무형유산 공연 등

(필요성) 몰입감 있는 실감콘텐츠(VR, AR 등)를 활용한 문화유산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코로나19 대응(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집안에서도 누릴 기회 확대

(수혜대상) 국민, 사회적 교통약자, 격오지 지역주민 등

제안내용

(목표) 우선 글로벌 기준으로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실감형콘텐츠 등을 제작, 개방하여 문화사업의 영역기반 확대

(주요내용) 실감형 콘텐츠* 제작, 체험공간 조성, 실감형 문화유산 활용 교육 등

* 3D 스캐닝, 360도 영상 기술, CG 등을 결합하여 고증된 창작물 등

(실천방법) 5G콘텐츠 선도개발, 민관협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개방

- 실감콘텐츠 체험존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협업

* 5G 덕수궁 문화유산 체험(SK텔레콤 협업, '20년 3월)

기대효과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범사례로 인용(언론보도*)

-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덕수궁('20.3.25)

(대국민 문화서비스 강화) 소회계층(도서산간지역민, 장애인, 노약자 등)의 문화유산
향유기회가 확대되어 문화복지 실현
(미래산업 창출) 새로운 문화유산 산업창출 기반 마련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내용 : 민간협업 활성화, 기업후원 연계)

공공체육시설 데이터화 및 활성화 방안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제안배경

서울시의 경우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만 해당됩니다. 즉, 우리집 근처에 축구장이 있는데 시가 아닌 구에서 운영한다면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으로는 예약할 수 없고 구청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공유누리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각 공공 체육시설이 어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지 공공시설인지 사립시설인지 잘 알 수 없는데 말이죠. 실제 공공 체육시설은 지자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공공체육시설찾기 어플(안드로이드)을 제작했지만, 데이터 활용이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아 다운로드수가 1,000건도 되지 않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도 기준 공공 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 있는 축구장은 69개로 파악되지만, 현재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예약가능한 축구장은 46개입니다. 더불어 2018년도 기준 공공 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축구장은 984개로 파악되지만, 현재 공유누리를 통해 예약가능한 축구장은 70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안내용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공 체육센터(구민체육센터 등)에는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정보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공공 체육센터 위치, 시설, 프로그램, 이용료, 강사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수강 신청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공공 체육시설 대관 예약을 간편하게 하고, 공공 체육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수강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연령대, 성별 등 지역주민의 성향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 시민들이 제안하고 공공 체육시설에서 마련합니다. 이는 획일화된 공공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다양화하여 참여도를 제고하고 예산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생활체육에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구공 하나만 가지고 모래 바닥에서 먼지 날리며 축구를 하던 모습은 이제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체육시설이 생기고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위해 정부에서 만드는 체육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적이며 활용 방법이 후진적입니다. 더 많은 예산과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체육시설 정보가 통합되어 제공되고 운동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장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공공체육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더이상 버려지는 돈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기타/못한 얘기들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국민의 건강 복지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더 좋은 시설이 생기고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 국민은 그 시설에 대해 알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체육시설이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담당자: 임세리

부서명: 주민자치과

연락처: 062-360-7663

분류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공공자원의 교류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자원 활용과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
-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문화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내용

- 서구 물품공유센터 운영 및 거점 확대
 - 서구 물품공유센터(2개소) 안정적 정착으로 운영 활성화
 - 생활물품 대여 및 나눔 공간 제공
 - 서구 물품공유센터 권역별 거점 확대 추진(2개소 → 4개소)
- 공공자원 개방 확대 및 민간자원 개방 참여 유도(주차장, 회의실 등)
-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주민참여를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공유도시 성장기반 마련

기대효과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공유촉진 및 공유가치 향상
- 보조금 지원 확대로 공동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주차장 개방 기대

정보공개확대해석 및 법령제정, POS-은행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관리위원회

제안배경

1. 보조금을 e나라도움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중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호 보조금 받는 법인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를 보여야함.
2. 지방 농협협동조합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4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만 지방농협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를 하지 않음
3.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여 모든 공공단체는 감사를 버리고 있음.
기업은 노동자, 주주, 채무자, 채권자, 지역사회 등 다양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감사를 하다가 적발하여 기업이 공사를 중단하면 이에 대한 사실을 은행에 알리거나
또는 적발사항에 대해 반성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재하여 지역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음.
그러기는 커녕, 개인정보보라는 미명하에 이름과 대표자명을 000처리 하고 있음.
- 4.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휴대폰기록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외교부장관제외)
- 5.결제시스템 : 뭐 사먹었는지는 영수증에 나오나, 은행에 ATM기계나 앱등에서는 알 수 없음.
POS기계와 은행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음.

제안내용

1. 기획재정부 - e나라도움시스템에 예산 개방화.

(기획재정부에서 만드는 보조금에 관한 집행지침에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산입)

2. 농림식품수산부 - 지방농협조합에 대한 - 정보공개업무사항기입
3. 행정안전부 - 감사사항에 000처리하지말라.
4. 선진국에서 하고 있음.
5. 우리나라는 IT강국임. 돈을 사용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지는 지 영수증이 발행해야지만 알 수 있음. 디지털화 할 수 있게 하면됨

기대효과

투명성확대

기타/못한 얘기들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법, 공직자윤리법 등 해당사항에 다 다른 통일시킬 방안이 필요해보임.

회의에 참석하시는 몇몇 분들이 이미 이사실을 알고 있을거라 예상함.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POS기와 은행에 연결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해 보임.

민간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제안 배경

전 세계는 디지털 혁명,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현실세계의 기술들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전보다 정보의 양은 막대하게 늘어났으며 정보 이용의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공공데이터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이며, IT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공공데이터 제공에 있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OECD 공공데이터 평가(2019)에서는 15년, 17년에 이어 3회 연속으로 종합 1위를 달성했으며, 가용성과 정부 지원 부문에서는 1위를, 접근성 부문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실제로도,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지난 2013년 5,272건에서 2019년 31,903건으로 6배 가량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이용 건수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건수도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와 민간 참여의 질적인 증가가 동반하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과정이다. 특히 민간 의견 수렴이 잘 이행되는지는 그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인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 1번가는 규정된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을뿐더러, 데이터의 품질 오류 신고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라는 자산의 특성 상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른 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안 내용

주요 내용, 실천 방법:

- 데이터 1번가의 개선

- 현재) 데이터 1번가의 목적이 불분명, 일방적인 데이터 제공 신청 플랫폼으로 전략 요청자와 포털 관리자 외에는 소통이 불가, 제 3자는 '좋아요'만 누를 수 있을 뿐.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과 중복 기능 확충

- 명확한 목적성 확립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선행 절차로서 목적을 분명히 할 것)

- 품질 오류 창구 생성

- 현재) 오류 신고 기능이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 일한 데이터가 필요한 제 3자는 오류가 처리된 상태인지, 처리 중인지 알 수 없으며 타 분야의 오류에 대한 정보격차 발생
- 민간 수요의 접근성 및 개방성 강화

기대 효과

-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 강화
 -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의견 수렴 가능 (개방된 데이터 내 세부 필요 사항 반영)
-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로서의 품질 제고
 - 자세한 의견 수렴을 통한 데이터 개방의 우선 순위 인지
 - 확진자 동선 어플, 공적 마스크 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 매쉬업 가능
- 민간 수요의 접근성 및 개방성 강화
 - 데이터 3번가에서의 자유로운 소통 (정보 요청자-포털 관리자-제 3 이용자 간)
 -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 수요자에게 데이터 탐색 경로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
- 오류 신고 창구 개선을 통한 데이터 오류의 유형 및 해결 정도에 대한 접근성 증가 및 포털 관리자의 민원 처리 개선

정보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포털의 광역지자체 단위로 운영

분류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정보공개부서)

제안배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정보공개법상 생산목록 뿐만 아니라 접수문서목록도 공개하도록되어 있으나 접수문서목록은 미 공개로 운영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는 시스템의 부하 등으로 이를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임
- 현 중앙부처가 통합하여 관리하는데 인적 물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정보공개포털을 중앙과 광역으로 분산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가 필요함

제안내용

□ 목표

- 국민 알권리의 기초 정보인 정보목록의 100% 공개

□ 주요 내용 및 실천 방법

- 접수문서 목록의 공개
- 정보목록 관리의 분산화
 - 중앙부처시스템 : 중앙부처 및 그 산하기관의 정보목록의 관리
 - 광역시스템 :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정보목록의 관리

- 교육기관 : 교육청, 교육기관 및 그 산하기관의 정보목록의 관리
- 정보공개청구는 단일화
 - 현행대로 청구처리는 공보공개포털에 처리

기대효과

- 기관의 정보공개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책임행정 역량강화
- 생산문서와 접수문서의 100% 공개를 통하여 행정 행위의 선후관계의 파악으로 행정의 투명성 강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시민의 행정감시 역량강화

반부패 분과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분류

반부패

함께하고 싶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배경

촛불운동과 정부의 노력 등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가 최근 몇년 사이에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수준은 국가의 위상에 비추어 부끄러운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부패를 추방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whistle-blower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도 관련 법이 있지만 여전히 whistle-blower를 제대로 보호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안내용

- 목표: whistle-blower를 보호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
-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co-creation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감.

수익소유권 투명성 강화

분류

반부패

함께하고 싶은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안배경

DAS 실소유주를 둘러싼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외에도 차명을 이용한 자산 은닉이나 도피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파나마페이퍼스 등에서 일부 드러난 것과 같이 거액의 검은 돈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숨어들어가는 등 국제적인 수준에서 금융부문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beneficial ownership transparency에서 한국은 G20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나쁜 성적을 받고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안내용

- beneficial ownership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co-creation 과정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반부패 신규 신고제도 도입

분류

반부패

함께하고 싶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배경

- 보복이 두렵거나, 애매한 경우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 부패 사각지대 최소화.

제안내용

- 이 공약은 신고자의 인권과 신변을 적극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일일정황보고와 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운영한다.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부서별 1명과 감사제도가 신설되어 운영되며,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신고자는 자신의 신변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무원,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1명은 부패방지를 위해 매일 일일정황보고를 반부패 정책을 관리하는 장 또는 감사의 장에게 보고한다.
 - ② 일일보고 받은 반부패 정책을 관리하는 장 또는 감사의 장은 이상이 없더라도 매주 각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 ③ 이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각 기관의 감사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항시 감시한다.

기대효과

- 신고자 신변보호 확실
- 일상보고로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부패 사각지대 발견, 조치로 반부패국가, 청렴한 국가 도약
- 고위 공무원, 고위 공공기관임원 등의 인식변화
- 반부패 행동 동기부여 등

기타/못한 얘기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정책(반부패 신규 신고제도 도입)으로 반부패국가, 청렴한 국가 도약을 위해 한 걸음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담당자: 박동영

부서명: 감사위원회
연락처:062-613-2231

분류

반부패

제안배경

-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등급(5등급)을 기록하는 등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도 하락
- 공정·정의 등 시대흐름에 걸맞은 청렴정책 추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민의 청렴요구 수준에 부응 필요
- 민관협력을 통해 공직사회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광주 구현 필요

제안내용

- 시대변화 및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발맞춰 청렴의 개념을 확대하여 전 공직자 대상 청렴 생활화 교육 중점 추진
-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 우수한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확산하고 비위공직자는 일벌백계하여 對 시민 신뢰 회복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성화 및 시정전반에 민간부문 참여 확대 추진으로 공직사회를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
-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으로 당당하고 자긍심 넘치는 공직사회로의 대전환 추진

기대효과

-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시민신뢰 회복과 지역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_____)

성과 및 출석에 따른 국회의원 연봉의 차등지급 및 의원들의 자기홍보 의무화

분류

반부패

함께하고 싶은 부처

국세청, 관세청, 인사혁신처

제안배경

- 추진배경:
여러 언론 등에 공개된 국회사무처 출처의 국회의원 연봉표를 보면 꾸준히 인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공개되는 정보는 부정적인 점, 일반 사무원들과 다르게 업무량에 따른 상/벌이 뚜렷하지 않은 점,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몇 대째 고쳐지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권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 필요성:
국회의원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명절수당,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 가족수당 등 많은 비용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보좌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보좌진들의 보수까지 더해져 연간 지급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있는 내과 등의 병원서비스나 테니스장과 같은 여가시설 또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과 같은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하고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복잡하고, 혹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언론이나 정부의 발표 등에도 의원들끼리 언쟁을 벌이거나 드잡이질을 하는 모습, 출석을 하지 않아 텅 빈 의회, 제대로 된 반론없이 무대포 형식의 파업 등 긍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하면 국회의원의 이미지개선 및 민심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수혜대상:
다름아닌 국회의원들 본인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필요 없거나 과한 봉급들을 깎아내면 처음엔 전과같은 연봉을 받을 수 없지만 제안내용의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연임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제안내용

- 목표

- 부정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실제로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 과하게 지급되던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국비 확보.
- 성과제를 통해 다양한 법안 제정 및 국회의원들의 활동.
- 연임시 자기어필을 통한 유권자 유치.

- **주요내용**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원'처럼 지급되는 연봉을 성과 및 출석에 따라 조절하여 지급합니다. 회사원들은 출석과 성과가 미흡하면 해고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의원들은 출석을 하지 않고, 일 또한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을 대신하여 일 하기 위해 뽑힌 자리입니다. 국민들은 일 하는 의원을 원합니다. 따라서 성과제를 도입하여 일을 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법안 제의, 의장 출석, 표결참석 등 각종 행위를 하였는가를 조사하여 연봉에 차등을 둡니다. 결석일이 일정 수 이상되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국회의원은 감봉, 면책특권에서 벗어나는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여 보궐 의원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의원들은 자신의 연봉을 지키기 위해, 또 더 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국회는 활발한 활동을 기본으로 다양한 법의 제정 및 오래된 법의 수정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의원 개개인의 기록으로 남게 되어 차후 의원이 연임을 하게된다면 선거활동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〇〇〇법을 발의하여 몇월 몇일 통과되었으며 〇〇〇법의 통과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활동하는 저를 다시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활동경력이 있거나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을 다시한번 선택할 것이고 의원들은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재선을 기대할 것입니다.

법안발의 또는 의회의 결과를 대중에 공개한다면 의원들은 청문회를 포함한 의회를 자주 열거나 법안 발의를 하는 자리를 자주 가지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몇월 몇일자 의회의 결과는 〇〇〇법 제정의 통과입니다. 찬성 의원은 총 몇명이며 반대는 몇명, 기권 몇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뽑은 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볼 것이고 찬/반의 결과와 별개로 해당 의원이 참석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뽑은 의원이 출석이 저조하다면 의원의 연봉이 삭감됨은 물론 지역민들의 청원을 통해 보궐의원(의원대리)를 선출할 수도 있으며 해당 의원/정당은 다음 선거를 위해 다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무조건 많은 활동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 역시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의미 없는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의원들은 실제로 효용이 없기 때문에 혹은 민심을 의식하여서라도 그 법안에 반대할 것이고 이는 곧 발의한 의원이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시민들 역시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의원이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의석에서 물러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 **실천방법**

일반수당 및 필수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하되 입법활동비, 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 명절수당 등은 삭감하여 모든 의원의 연봉이 같은 선에서

시작합니다. 출석은 의회소집일 확인하고 법안발의 및 통과 법안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각 의원 혹은 정당에서 준비한 것을 공개합니다. 국민들에게는 KBS 등 공영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합니다. 의원들의 각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상벌점을 정하여 점수에 따라 연봉을 지급합니다. 의원 기본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하여 상벌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연봉가감을 한다면 또한 의정활동의 동기가 부여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더이상 투표 후 잘하기를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역시 국회의원들이 잘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기위해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잘 하는 의원들은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일을 하지 않는 의원들은 연봉이 삭감되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끝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의원들은 '모범의원'을 보고 자신들 역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곧 국회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정해진 방송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지는 국회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민들 스스로의 주권을 의원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호감이 되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지역 주민들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기 의원들은 연임을 할 때 더욱 많은 유권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기타/못한 얘기들

이 제안은 참여율이 좋은 의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국민들 역시 의원들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며 의원들이 잘 따라주고 참여한다면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 역시 많이 쇠신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만약 이 제안에 반대한다면, 현재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공개하지 않으며 많은 혜택을 받고 싶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청렴 시스템 도입, 평가

분류

반부패

함께하고 싶은 부처

제안배경

제안내용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잘사는 그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대접을 잘 받으며, 월급도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매해 연말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참여한 정부부처의 소속 강사 활용으로 사각지대 없는 반부패 실천

분류

반부패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안배경

1. 추진배경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9점이라고 합니다. 180여개국 중 39등으로 선진국의 청렴도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아직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반부패, 부정부패의 척결을 피부로 와닿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권보호와 반부패 실천에 있어 국민참여가 정부의 목표이지만, 국민들을 모시어 윤리경영과 인권경영 정책에 대해 설명드려도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2. 필요성

국민제안, 국민참여, 국민소통 등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전이 중요한 시대에 인권 및 청렴에 대한 개념 및 인식이 높은 정부부처의 소속강사를 활용하여 밀접한 참여 및 소통이 필요합니다.

3. 공약에 따른 수혜자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을 활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성 있지 못한 제안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제안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에 시간을 소요하기도 합니다. 정부기관의 소속 강사를 활용하면 기관에 대한 밀접한 소통 및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 높은 정책은 결국에는 국민에게 그 혜택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1. 목표

- 1) 부처 소속강사는 국민에게 더 쉽게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 이해도를 높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출에 기여한다.
- 2)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는 해당 기관이 교육생을 엄선하고, 교육을 지원해주며, 강사 역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사들은 일반 국민 보다 청렴 및 인권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진 인재이지만 강의 외에도 공공기관의 청렴 및 인권 분야에 있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기관에 등록된 강사 수는 525명에 이릅니다. 해당 기관에서 예산을 들여 강사 초빙한 만큼 공공기관의 청렴 및 인권 분야의 모니터링 역할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실천방법

- 1) 현재 이원화된 정부혁신1번가, 도전 한국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일하여 보기 쉽게 사이트를 직관화 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2)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민과 정부부처의 가교역할을 하며, 안건 상정 및 실적 검증,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
- 3) 온, 오프라인으로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제안하여 전문가 역할로 참여한다.

기대효과

1. 정부 부처에 소속된 강사들을 활용하여 국민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에게 이해도를 높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출에 기여한다.
2. 소속 강사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기타/못한 얘기들

정부혁신1번가 및 광화문 1번가의 일반국민의 참여 비율이 낮은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공공분야 갑질 문화 척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구현

제안자

기관명: 방위사업청
담당자: 김호성, 최택진

부서명: 감사관, 혁신행정법무
연락처: 02-2079-6113, 6259

분류

반부패

제안배경

- 조직 내 갑질피해 예방과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건전한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갑질 문화 근절 및 인식개선 필요

제안내용

- 갑질 권한남용 부당한 지시 행위 예방
 - 내부 갑질피해 신고 시스템 개선
 - 전 직원 대상 갑질 자가진단
 - 직원대상 갑질예방 및 상호존중 교육 내실화

기대효과

- 조직 내 상 하급자간 및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업체간의 갑질 피해 예방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내용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담당자: 김선미

부서명: 법무감사관

연락처:

제안명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

반부패

제안배경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현황을 진단하고 기관의 자발적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을 독려하여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
- 공공기관의 부패현황 자체에 대한 파악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수립 및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예방적 대응에 한계

제안내용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활동으로 공직사회 부패요인 사전 예방 강화
- 전 공직자 청렴 실천서약 및 청렴주의보 발령
- 공직자 청렴특별강좌 실시,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 청렴 콜린-콜 운영, 온-오프라인 부패신고 활성화
- 구민 감사관 운영 등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통한 사전 부패 유발 요인 사전차단 및 정확한 진단 가능
-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로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제안자

기관명: 광주 북구
담당자: 황주용

부서명: 감사담당관
연락처: 062-410-6929

분류

반부패

제안배경

기관 청렴도 제고와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목적으로 효과성 높은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임으로써 자율적인 부패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제안내용

- 청렴 마인드 고취를 위한 청렴교육
 - 공감형 청렴 교육 : 청렴강의, 연극, 팝페라 공연 등 문화형 교육
- 청렴문화 확산활동
 - 청렴 아침방송 : 청렴을 주제로 관심분야 원고 작성, 방송
 - 간부참여 청렴메시지 정기발송 : 청렴관련 단문 전송

기대효과

- 참여·공감형 청렴교육 운영으로 청렴감수성 제고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

제안 관련 협의체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공기업 채용 관계자 서약서 강화를 통한 채용 투명성 강화

분류

반부패

함께하고 싶은 부처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제안배경

제안내용

- 공약의 목표: 공기업 취업 투명성 강화
- 아직도 뉴스에서 사회유력자 자녀의 불법 취업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블라인드 테스트로 전형과정을 지원한다고 한들 영향력을 피력하는 사람이 취업 유관계자에게 개인적, 불법적으로 연락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취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약서를 보강하기를 권합니다.
- 실천방법: 취업 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자들은 서약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서약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공공기관 채용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서약서 내용을 어길 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인척 채용과정 개입 차단 강화 등 공공부문 채용 투명성 제고

제안자

기관명: 광산구
담당자: 최영민

부서명: 감사관
연락처: 062-960-8071

분류

반부패

제안배경

- 대표적 생활적폐인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하여 '17년·'18년에 이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채용 전반에 잔존하는 비리요인 일소
- 그동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보완·발전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유도

제안내용

- 조사대상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신규채용, 정규직 전환, 감사원 지적 사항)
- 조사내용 :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 감사 및 감사원 지적 유사사례 점검
 - 신규채용 : 정규직, 계약직, 공무직, 비정규직 등 신규채용 전체
 - 정규직전환 : '신규채용 단계'와 '전환단계'를 구별
- 친인척 현황 조사
 - 원 칙 : 이사장 책임 하에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를 득해 실시
 - 방 식 : 개인별 설문조사 후 취합
 - 대 상 : 신규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18. 11. 1. ~ '19. 11. 30.)
 - 활 용 : 비위제보 조사 목적으로만 자료 세부내역 확인
 - 친인척범위 : 4촌 이내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

※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2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거

※ 친인척 채용비리 혐의가 농후하거나, 비위제보 등이 있을 경우 촌수에 무관하게

조사 가능

기대효과

- 채용 전반에 잔존하는 비리요인 일소

재취업 심사대상 확대

제안자

기관명: 공정위
담당자: 서용석

부서명: 감사담당관실
연락처: 044-200-4106

분류

반부패

제안배경

- 공정위는 공정위 신뢰제고·조직쇄신방안('17.9월, '18.8월)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퇴직자의 재취업을 관리해 왔으며,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5급 이하 퇴직자의 취업심사 제도가 개선됨

제안내용

- '20년 하반기부터* 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취업제한 및 심사
 - * '20.3.20. 공정위 취업심사 대상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6.4. 시행예정)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후 취업 가능
- '19.12.31. 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수 155명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478명* 증가하여 총 633명(약 4배 수준)으로 확대

기대효과

- 취업심사 대상자 확대를 통해 공직자가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 업체에 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56-58

시. 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하는 청렴. 공정사회 만들기

제안자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양용석 사무관

부서명: 민간협력담당관
연락처: 044-200-7160

분류

반부패

제안배경

-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 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17개 광역시. 도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 시. 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소통. 협력하여 공정. 투명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여 청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

제안내용

① '청렴'의 개념(반부패+공공선(公共善)) 확립

- '청렴'은 도덕, 준법, 배려(≠갑질), 투명, 공정, 신뢰, 사회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② 공공기관 청렴행정. 청렴경영 실천 운동

-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기관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각자가 맡은 업무(정책 수립, 집행 등)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청렴행정. 청렴경영*을 실천

* 부패가 없는 소극적 상태에서 더 나아가 공정·공평·투명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의미

③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

- 청렴행정. 청렴경영을 적극 홍보하고, 일반시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과 소통.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 언론 매체와 유튜브 등 SNS 활용, 문화행사 연계 등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재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민간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

기대효과

-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을 개선
 - ※ '18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질문에 대해 공무원은 7.7%, 일반국민은 40.9%가 '그렇다'라고 응답
-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국민체감도를 향상하고 민간부문에 청렴문화를 정착·확산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발전에 기여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 있음 (협의체 명칭 : 시. 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 있음 (내용 : 시. 도별 청렴문화 확산 활동)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

제안자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추수진

부서명: 제도개선총괄과
연락처: 044-200-7221

분류

반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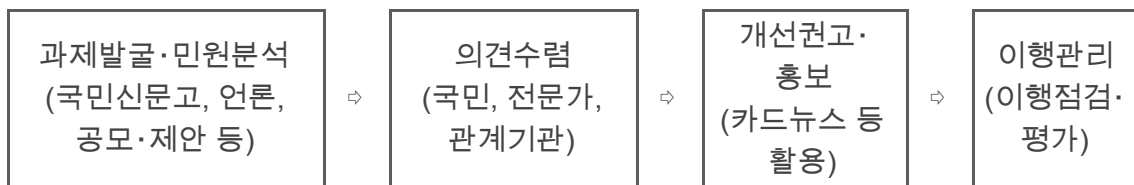
제안배경

- 교육·일자리·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특권까지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 확산
- 특히 밀레니얼·2030 등 미래세대는 ‘기회의 불공정’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강력한 공정성 제고 대책을 요구

☞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우리사회 혁신을 가로막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 특혜요인을 발굴·개선

제안내용

- (주요내용) 기회장벽 제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일상생활 속 불공정 개선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개선
 - 특히 공정 감수성이 높은 청년층에게 불공정으로 작용하는 ‘청년체감 공정과제’ 및 비대면 소비트렌드 등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 제도 집중 개선
- (추진체계)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 국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권고



기대효과

- 국민 목소리에 대한 분석 및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공정을 실질적으로 개선
- 특히 청년층이 공감하지 못하는 기회장벽의 제거 및 변화하는 사회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요구에 부응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내용:)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운영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담당자: 박동영

부서명: 감사위원회
연락처: 062-613-2231

분류

반부패

제안배경

- 의향광주 명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불의·부도덕에 대해 강력한 대응
- 허위뉴스, 가짜사실유포 등 억울한 일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소송지원 등 사법 분야에 대한 구제 필요

제안내용

- SNS(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 시민 권리구 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 대리, 형사 고소/고발 대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률행위 지원

기대효과

- 상담, 민사·형사소송대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피해입은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통한 정의롭고 배려하는 광주 실현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컨설팅 실시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담당자: 조미라

부서명: 감사담당관
연락처: 062-360-7579

분류

반부패

제안배경

- 부정·부패 선제적 예방강화로 부패행위 근절, 부패유발 요인 제거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

제안내용

-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
-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한 반복적인 청렴 교육 실시
- 청렴도 취약분야(인허가 부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실시 및 주민대상 공익신고 보호강령 등 홍보 강화
-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공유 및 신고대상·신고방법 안내
- 공직자 부조리신고·공익신고 신고시스템 및 갑질센터·각종 신고센터 운영

기대효과

- 기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소속감 및 일체감 조성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관련 법령·조례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개인별 청렴실천 능력 강화로 주민 체감 청렴지수 향상 기대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_____)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_____)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화 시스템 구현

분류

반부패 /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배경

- 제가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말한 스위스의 정치 시스템이 인상적이어서 이 안건을 제안드립니다.
스위스는 주민이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게마인데는 칸톤(주정부)을 감시하고, 칸톤은 연방정부를 감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모든 칸톤의 독립지위 보장하고 별도의 입법·행정·사법부 갖추고 있어서 의회가 있어도 주민전체가 입법부 국민발안을 통해 헌법 제정·폐지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정치시스템을 가진 한국과 달리 주민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패를 줄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내용

1. 헌법 개정을 통한 한국의 지방 분권화 시스템을 확실히 구현

결정권자들이 소수이고 위에 있다면 많은 부정 부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로비는 결정으로 인한 이해 관계 때문에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물로 시스템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분권화로 결정하는 주체를 작은 단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이 되어야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이 좀 더 결정에 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같은 경우, 지방 분권화 시스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 권한이 지방으로 100% 이양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 교육, 건강관련 업무, 공간 및 토지이용(도시계획)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들은 지방에게 그 권한을 100% 위임하여 사이즈가 큰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결정에 대한 주민 견제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2. 주민 발안제도 실시

스위스의 주정부에서는 칸톤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폐지를 ‘국민발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발안의 안건을 칸톤의회가 부결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구역, 자신의 이익과 행복이 직결되어 있는 곳을 위한 결정은 주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위에서 로비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다수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결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도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고 빠르게 결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문화, 건축·환경, 법무·안전, 재정·복지, 내무·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민발안제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 의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소수당의 의견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 지방분권화 시스템을 헌법개정을 통해 확실히 구현하고 주민 발안제도를 도입하여 아래로부터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치 부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주민발안제로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관련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신속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재정 투표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못한 얘기들

- 전문가도 아니고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감사 강화

제안배경

(현황)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4.81%로 세계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2018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발표(2019.12.18.)를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따라 국가 R&D예산은 매년 대폭 확대('19년 20.5조→'20년 24.1조)되고 있다.

(문제점)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국가연구개발비가 '눈먼 돈'이라는 일부 그릇된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부패방지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혜대상) 단기적으로는 연구자,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일반국민

제안내용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패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비가 연구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①(투명한 R&D 선정·관리) 연구사업 청렴모니터링단 운영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연구사업 선정평가 현장에 청렴모니터링단*이 참관하여 공정하게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 제3차의 입장에서 평가 현장 환경, 평가위원 구성/운영의 적절성, 이해관계자 개입여부 등을 모니터링

※ 설문결과('19.) : 평가위원 80%, 과제신청자 92.9%가 청렴모니터링단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②(신고 활성화) 연구비 비리신고를 위한 유관기관 홈페이지(BRIC, 김박사넷 등) 신고배너 운영,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연결 등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익명성을 보장하여 적발을 강화한다.

※ (익명신고시스템 활성화)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는 학생 등 신고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익명보호 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운영하여 신고자가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익명 신고체계 운영

③(감사기능 강화) 연구비 비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분하기 위해 조사와 감사를 접목한 「I(Investigation, 조사)&I(Inspection, 감사) System」을 운영하고 범죄혐의 확인 시,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벌로 연구현장의 인식을 개선한다.



기대효과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패방지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능력에 따라 국가R&D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투명한 연구환경이 조성된다면, 직접적·단기적으로는 현장의 연구자가,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확보로 국가와 일반 국민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투명성과 효율성 고취를 통한 정부신뢰의 제고

분류

반부패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서울/부산/광주 등 주요 지자체 OGP담당자

제안배경

-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적으로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투명성 지수나 부패지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지자체의 낮은 투명성과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년 예산이 1조 억원 정도 되는 지자체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도 낮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도 낮은 곳이 많습니다. 언론에도 지자체 비리 관련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 지자체는 정치인들이 중앙 정부로 가기 전에 수십~수백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하는 곳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 정부신뢰를 측정할 경우, 일반사람이 중앙정부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론이나 지자체의 행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정하게 됩니다. 한국정부 신뢰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 투명성과 효율성 고취를 통한 정부신뢰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1. 목표

- 지자체 투명성과 효율성 고취를 통한 정부신뢰의 제고
- 지자체와 정치권력 유착비리 감소

2. 주요 내용

- 지자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실태조사
- 지자체 비리 현황 및 실태 조사

- 지지체에 대한 시민의 신뢰, 불신, 부패지수 조사
- 지자체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의 추진방안 마련

3. 실천방법

- 연구원(예, 행정연구원 등)과 OGP 위원들과 연구팀을 꾸려 실행

기대효과

1. 지자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고취
2. 지자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 제고
3.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4. 정부신뢰 제고에 따른 국민의 정부 사업에 대한 순응도 증가

악성민원 해결제도 마련을 통한 행정력 제고

분류

반부패

함께하고 싶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안배경

- 매년 공직자에 대한 악성민원 피해 사례가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피해 공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피해 공직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정상적인 업무방해 등으로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제안내용

- 목표: 고질적인 악성민원 근절을 통한 국가 행정비용 절감
- 주요내용: 악성민원 신고에 대한 공직자 구제절차 마련
- 실천방법
 1. 공직자 악성민원 피해 신고센터 설치
 2. 공직자 악성민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기준 마련 및 판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
 3. 공직자 악성민원 피해 구제절차 제도화(소송비용, 육체 및 정신적 치료비용 지원, 신변보호 등)

기대효과

1. (대국민) 고질적 악성민원 대응에 필요한 행정비용 등 절감에 따른 국가사업 경쟁력 확보(집약된 자원을 필요한 곳에 활용)
2. (공직자) 공직자 인권보호, 피해구제 장치 마련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적극행정 지원
3. (기타) 제도학습을 통한 고질적 악성민원 사전 예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분류

반부패

함께하고 싶은 부처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배경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는 더욱이 드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 중 독일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꾸준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1년), 사이프러스(2004년), 그루지아(2004년), 루마니아(2006년), 몬테네그로(2011년) 등이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고, 명예훼손의 비형벌화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종 국제 기준과 국제기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비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규약위원회는 제34호 일반의견(General Comment No.34, 2011. 9. 12.)에서 우리나라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자유권협약) 제19조의 “의견 형성과 표현의 자유”(Freedoms of expressions and expression)부분에 대한 해설 제47번째 문단에서 형사범죄로서의 명예훼손죄에 관해 다섯 범주(단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a)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됨.
- (b)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악의(내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형벌로 처벌해서는 안됨.
- (c)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의견 표명을 한 개인을 명예훼손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됨.
- (d) 사실적시 여부를 떠나 모든 형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화는 바람직하지 못함.
- (e) 범죄로서 명예훼손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극히 중대한 사건으로만 제한되며 그러한 경우라도 구금은 적절한 처벌이 되어서는 안됨.

UN 총회 산하의 UN 인권이사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기구들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이러한 인권규약의 해석에 따라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UN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형사절차로 인한 체포의 위협과 재판 전 구속의 위협, 높은 비용의 형사재판에 대한 부담, 과도한 벌금 부과, 구금, 형사기록의 전과로 인한 위협과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절대 형사 범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징역과 같은 구금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형법전에서 삭제, 즉 폐지하고 민사법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 대한 한국에 관한 UPR 워킹그룹 보고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이행감시체제로 설립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차 피해의 요인 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한국의 명예훼손죄의 규정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공약의 필요성

1. 진실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말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지만, 이 조항은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 목적을 위해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입니다. 또한 ‘공익성’이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써 판단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 하여 표현의 자유 행사를 위축시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으로, 옹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형사처벌의 위협이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공유는 구성원간의 사회 현상에 대한 진리 탐구와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은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발전적 고발을 억제시킴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해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법이 진실한 사실의 발설을 막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명예는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표현의 허위·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현재의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억고소당하여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협에 놓이게 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협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위축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용기 있는 고발을 억제합니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과정까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자 만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은 이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이라면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체불, 폭행, 대리점 갑질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공표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 진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유엔 자유규약위원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폐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론이 전 세계적인 주류이고,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고 법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존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장기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존치시키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넓혀 비범죄화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판례의 논리를 단기간에 변경하기는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범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제재가 존재하고,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거나 비구금형으로 하고 있음은 명예보호를 위해 형벌 이외의 이러한 민사적 수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 시도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못한 얘기들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투명성 분과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도입

제안자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자: 이범한

부서명: 참여예산과
연락처: 044-215-5481

분류

재정 투명성 / 참여·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국민들이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직접참여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안내용

- 참여예산 상시 운영*을 통한 국민 참여 기회의 확대
 - * 비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예산국민참여단의 상시 운영 도입
 - 제도의 상시적 운영을 위해 매월 각 부처 적격성 검토 및 사업 속의 프로세스 마련
 - 참여예산을 국민제안형/토론형 투트랙으로 운영
- 예산국민참여단 역할 확대

기대효과

- 예산편성 및 예산속성 과정에도 국민참여 확대 ⇒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도 및 전문성 강화
- 내실 있는 참여예산사업 발굴 추진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국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내용 :)

67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및 재정 투명성 제고

제안자

기관명: 기획재정부
부서명: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
담당자: 이승민
연락처: 044-330-1531

분류

재정 투명성

제안배경

- 그간 정보공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 등 재정정보가 분산 공개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필요
* 19년 세부사업설명자료(7,708개) 공개, 홈페이지('15.7월 오픈) 전면개편('18.1월) 등

제안내용

- 제한된 정보의 일방적 제공이 아닌 다양한 사업별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제공하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추진
- 정부(중앙+지자체+교육청)의 예·결산정보*, 집행정보**를 열린재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개. 확대
 - * 열린재정(중앙), 지방재정365(지자체), 교육재정알리미(지방교육)
 - ** 부처·기금 홈페이지(중앙), 지자체별(일반·교육) 홈페이지
 - 맞춤형 수혜자 정보 One-Stop 제공 범위를 現 보조금 수혜정보에서 중앙정부 용자·출연금, 지방·교육재정* 정보까지 확대
* 정부 24(지방재정), 교육지원 한눈에(교육재정) 등
 - 중앙, 지방,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및 국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 성과관리, 민간투자사업, 참여예산 등 테마별 재정정보 공개 확대 및 국민관심 통계

개발. 공개

* 국민관심이 큰 테마별 예·결산 정보 및 미세먼지, 일자리, 전염병 등 관심통계 개발

- 재정혁신국(재정정보과), 사업단 및 행안부·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현황분석, 세부 이행계획 마련 후 시스템 구축(22년1월구축 완료예정)

기대효과

- 통합 재정정보 및 맞춤형 수혜정보 One-Stop 공개, 국민 관심통계 개발 등을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및 사용 편의성 제고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분류

반부패 / 재정투명성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제안배경

- 공공기관 기관장 및 고위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부정사용과 불투명한 정보공개 및 불성실한 증빙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업무추진비 존재 자체가 특권처럼 비춰지고, 공적영역을 감시하는 언론 및 사회운동에서는 오랫동안 감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기관장과 주요 고위 공직자 및 부서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지출목적', '지출대상', '총액' 만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되고 있는 정보도 '지출목적' = '회의', '지출대상' = '관련 참석자', '총액' = '사용금액' 과 같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공개되고 있어 업무추진비의 공개 목적인 투명성도 전혀 담보하지 못하며, 아예 정보로서의 기능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매년 업무추진비 관련 많은 문제들이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논란'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200420010007092>

운용대 대전시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바당 사용 혐의' 부인

<https://www.news1.kr/articles/?3906599>

천안교육지원청 법인카드 4980만원 어디로?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96>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가고 마트 식재료 산 공무원들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3059100001?input=1195m>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때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전자전표(영수증)을 같이 첨부해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내용

1.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를 강화.
 - 현재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공개
 - 지출일시, 행사(사업)명, 지출목적, 지출대상, 지출대상 인원 수, 지출장소(상호), 구매내역, 지출금액 등으로 항목 세분화
2.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전자전표(영수증) 첨부
 - 공개하는 지출내역에 전자전표(영수증)를 첨부해 함께 공개
 - 현재 업무추진비는 극히 일부 특수한 경우 현찰 지출을 제외하고 모두 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방식임
 - 따라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 이용에 따른 전자전표를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음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공개할 때 해당 기간 전자전표를 다운 받아 첨부

기대효과

-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공개를 강화하고 증빙자료인 전자전표도 함께 공개할 경우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업무추진비 내역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제안과 같은 정책이 실시될 경우, 공공기관 및 공직자 스스로 사전적인 자정 노력이 가능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오남용 관행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오남용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증빙자료가 기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를 부인하거나 은폐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 투명성의 혁신은 거의 아무런 추가 예산이 필요 없이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결심과 담당자들의 작은 수고 만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선거보조금 투명성 제고

분류

재정투명성

함께하고 싶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제안배경

-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66.2% 투표율을 기록하며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번 선거에는 무려 35개의 정당이 정당투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당 모두 자신들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과 가치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하겠지만 이러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때 국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선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 총선에 275명의 후보를 냈으나 모두 낙선했습니다. 배당금당은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전과자까지 후보로 추천하는 등 막장공천 논란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성 추천 보조금 명목으로 8억4,000여만원을 타냈습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정치자금법 기준보다 딱 1명 많은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면서 여성 추천 보조금을 챙긴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26조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의 30%, 즉 76명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면 해당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보조금 8억 챙긴 '허경영 배당금당' 후보 257명 모두 낙선 기사 인용) 국가혁명배당금당 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정당을 비롯하여 소수정당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선거 활동에 대해 국민들 대부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안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이 받는 선거보조금은 물론 후보가 받는 선거보전금 등을 공개하여 선거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세부 항목을 선거전에 미리 공개하고 국민들이 함께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 함께 만드는 선거로 만들고자 합니다. 후보의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붙어있고, 후보의 명함은 이곳저곳에 뿌려져 있고, 선거 유세차량, 선거보조원들이 인사를 하고 춤을 추는 모습, 이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조금 더 나은 정책

공약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선거 활동에 쓰이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나아가 향후 선거가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진행되고 선거 유세 활동도 유튜브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 향후 선거는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진행되고 선거 유세 활동도 유튜브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선거문화의 변화에 발맞춰 선거보조금을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선택을 위한 선거에서 국민이 함께하는 선거 활동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앞서 디지털 국회를 목표로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고개를 숙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던 국민들에게 선거 활동과 비용지출을 함께 만드는 활동은 4년마다 찾아오는 정치참여 활동이자 잔치가 될 것입니다.

기타/못한 얘기들

- 선거는 국민의 주권자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선거로 인해 세금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 지급 방법 개선

분류

재정투명성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법제처

제안배경

- 1.추진배경: 변호사들이 선임료를 '부가가치세' 부담때문에 고객에게 선임료를 할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는 경향이 있음.
- 2.필요성: 세금포탈 방지와 국가재정 수입에 기여.
- 3.효과성: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제안내용

- 1.변호사에게 민사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선임료를 낼 때 조세포탈을 하지 않도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선임료를 내게해야 함.
- 2.변호사 선임료 카드납부제 의무화 및 법제화

기대효과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통상 협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 참여 보장

분류

재정투명성 / 참여와 사회적 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제안배경

- 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며 개방의 폭은 더 확대되고 있음. 2000년대 중반까지 WTO 중심의 다자주의를 우선시하던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FTA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변경하여,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후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한미 FTA(2006년 협상 개시, 2012년 발효), 한-EU FTA(2007년 협상, 2011년 발효), 한중 FTA(2012년 협상 개시, 2015년 발효) 등 단기간에 많은 FTA를 체결함.
- 이 과정에서 여러 명칭의 통상전략이 등장하였지만, 모두 FTA의 양적 확대가 목표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전 세계 GDP의 90%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함.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따른 FTA 정책 추진 방향으로 ‘혁신’, ‘확장’, ‘활용’의 3가지 관점을 제시하였지만, 통상협상은 비밀주의, 밀행주의로 일관하여 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통상 협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개방의 효과가 모든 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그 동안 소외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통상 정책과 협상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안내용

- 현재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고,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련 공공기록의 목록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함.
- 이를 위해 현재 fta.go.kr 사이트를 개편함.
-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함.

- 유럽연합은 통상 협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웹 사이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누구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 (EC의 "transparency in action" <https://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395>)
- 2015년 10월 이후부터 진행되는 FTA 협상에 대해 유럽연합은 EC가 제안한 협정문안을 챕터별로 정리해 모두 공개하고 있음.
- 유럽연합보다 훨씬 더 개방된 통상정책을 펼치는 우리는 유럽연합 보다 더 투명하고 많은 범위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FTA는 수출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좁은 의미의 무역협정이 아니라, 노동과 환경,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인 내용의 협정임. 따라서 통상 협상의 투명성을 강화하면, 우리 사회 전계층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는 통상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그 만큼 개방의 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통상규범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자발적 규범 준수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상관료들도 다양한 견해를 청취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음.

공공기관 네트워크장비 발주 적정성 온라인 제공

제안자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박성원

부서명: 네트워크정책과
 연락처: 044-202-6425

분류

반부패 / 재정 투명성

제안배경

- (현황) 공공기관에서 네트워크장비 구축발주시, 과도한 규모산정을 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 및 표준에 따라 적정규모를 산정해야 함
 - (문제점) 공공기관 이용자가 적정규모 산정을 수기로 자체 산정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높아 공공기관 이용자들이 어려움 호소
- (필요성) 장비 구축 발주 시 필요한 네트워크장비 규모산정의 기술적 어려움 해소 및 장비규모의 적정성·객관성·정확성 제공 필요

제안내용

- 규모산정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험 운영개시('20.12월)
- 교환장비 대상 규모산정 시스템 구현('21년 1월~12월) 및 제공
 - 공공분야 협업기관 대상으로 규모산정 시스템 시범 활용
- 전송장비 대상 규모산정 시스템 구현('22년 1월~12월) 및 제공

기대효과

-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규모산정 지침 이해도 증진 및 이용 활성화
- 적정규모 산정을 통한 국내 중소장비의 시장 진입 기회 확대 및 공공부문 구축 예산 절감
 - 과도한 네트워크장비 규격을 발주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및 공정경쟁 환경을 제공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내용 : 공공기관 대상 발주 교육·안내)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담당자: 전경모

부서명: 기획예산실
연락처: -

분류

반부패 / 재정 투명성

제안배경

- 예산과정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사 수렴 및 의견 반영 확대
- 주민의 실질적 예산과정 참여를 위한 적극적 운영 방안 개발 필요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질의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필요
-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의 구정 참여 욕구 증대

제안내용

-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 및 확대를 통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 주민공모를 통한 주민체감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사후 관리

기대효과

- 예산성립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 향상
-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기능 강화
-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점검 강화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있음 (내용 : 있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담당자: 심가현

부서명: 기획실
연락처: 062-360-7799

분류

재정 투명성 / 참여·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예산 수립 과정에 지역 주민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재정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제안내용

- 동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으로 주민 역량 강화 및 참여의식 고취
 - 다양한 분야에 양질의 사업 발굴, 주민의 구정살림에 대한 이해도 향상
 - 동 지역회의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 운영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회의 건의사업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우선순위 조정 등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 동별 현안사업 취합,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
- 온라인 주민참여 방안 강화
 - 구 홈페이지 및 각종 SNS를 활용한 소통 및 제안 창구 마련

기대효과

- 예산 수립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로 성숙한 참여예산제도 정착
- 구 재정여건에 맞는 제도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 모색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전 과정 주민참여 및 공개

제안자

기관명: 광주 복구
담당자: 임 유 경

부서명: 기획조정실
연락처: 062-410-6054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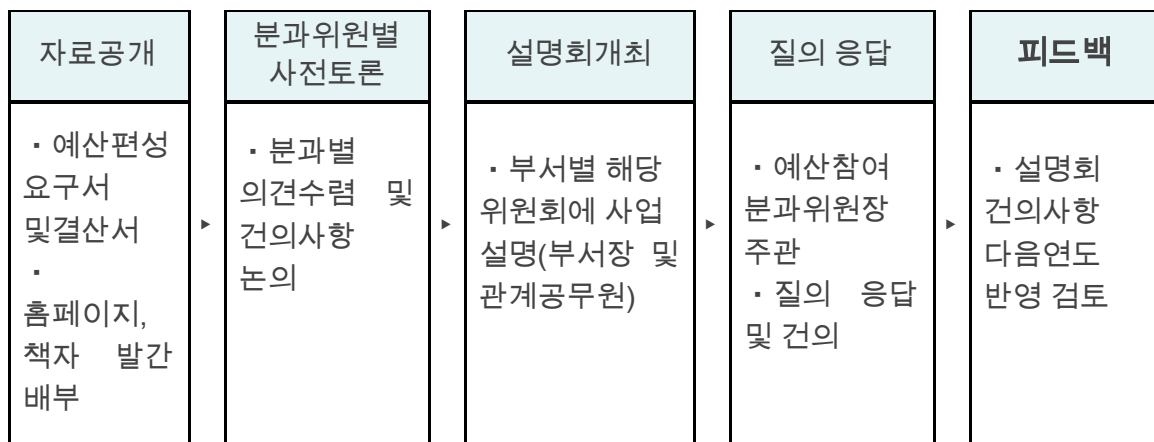
재정 투명성

제안배경

- 예산의 편성에서 결산까지 전과정 주민참여로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재정자치 실현
-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피드백 제공

제안내용

- 예산요구 및 주요사업, 결산내역에 대한 사전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 예산편성에서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 홈페이지 공개
- 운영절차



기대효과

- 주민 알권리 보장으로 열린행정 구현
 - 사업의 필요성, 추진타당성 등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 및 전반적인 절차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 유도
- 부서의 적극적 참여와 주민의사 반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환류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 및 주민참여 상시화

제안자

기관명: 광산구
담당자: 권서현

부서명: 기획관리실
연락처: 062-960-8088

분류

재정 투명성

제안배경

- 자발적 주민 참여로 '주민행복' 중심의 다양한 의제 발굴 및 실현
- 주민자치회 총회와 연계해 진정한 풀뿌리 재정민주주의 직접 구현

제안내용

- '광산구 행복지표'를 활용한 제안사업 심사 기준 마련·선정에 반영
- 참여예산 온라인 열린 플랫폼 개편으로 실질적 참여예산 참여 계기 제공
- 책임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모니터링 활동, 사업 심사 등)

기대효과

- 참여예산 홈페이지 확대 개편 추진 활용
-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의 주도적 역할 부여

제안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 있음 (내용 :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및 모니터링 등)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제안자

기관명: 해양경찰청
담당자: 경사 이영주

부서명: 운영지원과
연락처: 032-835-2217

분류

재정투명성(공공 조달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

제안배경

- 첨단 장비 도입 시 조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장에 상용되지 않는 해양경찰의 혁신기술 발굴

제안내용

- (투명성 확보) 본청·소속기관 혁신제품 수요 발굴, 시범운용 후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전 소속관서(합정341척·파출소96개) 확대구매 추진
 - * 「초기 판로개척을 위한」 기술개발 시범구매제품, 「벤처기업판로확보를 위한」 혁신시제품
- 시장에 상용화되지 않는 혁신기술 수요 발굴 구매추진
 - (경쟁적 대화방식의 계약*도입)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입찰업체와 협의를 통해 규격을 결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 활성화
 - * 미래형 정보통신시스템 분야, 불법중국어선 단속 전담함정 개발 분야 활용
 - (R&D사업 조달연계 활용) 우리청이 진행 중인 R&D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테스트베드* 참여하여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적극 활용
 - * 기술혁신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초기구매자로 제품을 테스트하여 상용화하는 제도

기대효과

- R&D 사업과 조달방법의 연계를 통해 투명성 확보, 비상용 제품에 대한 사업 활성화

참여 및

사회적가치 분과

정책 컨퍼런스 제안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국회, 행정부 주무부처

제안배경

-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66.2% 투표율을 기록하며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는 정책으로 경쟁하기보다 이념과 후보 흠집내기로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펼쳐질 예정이며 해당 정책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밀접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스웨덴의 선거 투표율은 85퍼센트 수준에 이릅니다. 1980년대까지는 90퍼센트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높은 투표율은 일상의 정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스웨덴에서 정치는 일상이고, 축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분야인 동시에 가장 자주 접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스웨덴 국민이 정치를 얼마나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알메달렌 주간(Almedalsveckan·The Almedal Week)입니다. 스웨덴의 정치 축제 알메달렌은 다양한 정책 이슈가 마치 박람회나 전시 상품 같다는 의미에서 정책 박람회라고도 불립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같은 다양한 정치인들이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정책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세미나와 토론, 정당 대표자들이 출전하는 댄스배틀, 록 페스티벌 분위기의 연설로, 정치가 어떻게 휴가, 축제, 일상과 결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에서 인용함) 이처럼 국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정책 이슈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토론하여 합의점을 만들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 1안: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선보이고 국민들과 토론하는 연례 컨퍼런스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정당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역구 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 2안: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현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컨퍼런스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만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됩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과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좋게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컨퍼런스를 통해 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토론과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듭니다. 재정분야, 국방분야, 고용노동분야 등의 세션을 나누어 정책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는 외교관, 경찰, 교육부 공무원 등을 꿈꾸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직업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행사 대신에 각 정부의 공무원들을 초빙해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효과

- 정부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장이 만들어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는 투명한 사회가 기대됩니다. 또한 정책의 결과를 놓고 평가한다기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국민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제안배경

- 현재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서 일정 이상 수의 주민의 연서가 필요함. 이 연서명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서명 등이 포함됨.
- 연서가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되면 읍부즈만위원회와 해당 자치단체에서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절차를 거침. 이때 주민들이 이름이나 주소를 오기하여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주민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것이 원 취지이지만, 절차적 문제로 주민들의 참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악필이나 오기로 인해 유효 서명을 확인하고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도는 감사 청구 등을 위한 연서는 연서명 양식에 직접 펜으로 필기해야 하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어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연서명 홍보와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더구나 필기를 통한 연서명은 상대적으로 위조 서명이 쉬워 시민들의 의견이 왜곡 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많은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기도 함.

제안내용

-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입법청원 등 많은 분야에서 전자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오프라인 연서명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을 뿐임.
-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온라인 서명, 기타 본인인증장치들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주민감사 청구 연서명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마련하여, 주민감사 청구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함.

기대효과

-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 오프라인 서명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
- 주민 참여 절차 간소화

국민 참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열린 행정 플랫폼 구축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 국민참여혁신과, 민원제도혁신과)

제안배경

(배경)

- 국민의 의견을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현행 제도상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된 법률은 172개이며, 공청회의 개최를 조문에 명문화된 법률은 32개가 존재하나, 그러나 행정기관이 의견 수렴을 위한 소극적인 공지 및 의견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답변 없이 일방적인 미반영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이 부족함
- 공론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해커톤, 민간 자문단 등의 운영에서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내용만 발표, 설명하는 것으로 행하여 지고 있어 행정기관의 폐쇄적인 참여자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의사 결정의 근거로 활용 및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에 대한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음

(목적)

-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독단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 권리의 회복
- 국민이 제도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국민 주권의 실효성 강화하고, 행정의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로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함

제안내용

-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에 대한 부처별,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공고 및 데이터 기반의 단일화된 의견 수렴 플랫폼의 구축
가. 데이터 기반의 의견 제시

나.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공개 및 부분반영, 미반영 의견에 대한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근거 제시

예시)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수립, 도로건설 등 수립시 행정기관은 행정행위 공고를 관보, 지역일간지 등에 게시하고 있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국민은 그런 행위가 발생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

- 공론화를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해커톤 등의 투명성 확보
 - 가. 참여자(발표자, 토론자 등)의 공개 공모 및 선정 사유 공개
 - 나. 행사 공고시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자료(발표자 자료 포함) 공개
 - 나. 행사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의 공개
- 유사 사례 검색 등 다양한 검색을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 가. 유사 사례 및 근거 데이터의 검색

기대효과

-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사전에 알리는 사전적 정보(공고문)에 대한 접근성의 강화를 통한 국민의 행정 참여 확대.
- 행정기관의 정책 의사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해커톤, 공청회 등의 구성을 개방적이며 투명한 운영 통한 정책수립 과정의 투명성 확보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협의 플랫폼 구축

제안자

정부혁신 국민포럼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공무원들은 밤낮없이 애쓰고 있지만,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다. 외국인 입국금지와 마스크 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도입 및 정보공개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사후적·하향식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는 열린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다.

제안내용

-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협의 플랫폼(가칭 '열린정책')을 제안한다.
 열린정책의 운영방식은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을 실시간으로 열린정책 플랫폼에 공개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영상 또는 문서로 남겨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도록 한다. 열린정책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청원(정책의제설정)-열린정책(정책결정)-정보공개포털(정책집행공개)가 연계되어야 한다.

기대효과

- 첫째,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국민청원)의 정책결정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고취시키고 정책체감도를 높인다.

- 둘째, 정책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열린정책), 정책집행의 구체적인 결재내용을 공개(정보공개포털)하여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 셋째, 열린정책 플랫폼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집단지성을 통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도출한다.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자

기관명: 공정위
담당자: 편유림

부서명: 기업거래정책과
연락처: 044-200-4586

분류

참여·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

제안내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하도급법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
-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모범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업무절차도 개선
- 금형 관련 모범거래관행(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공공분야 발주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주요 소프트웨어사를 하도급서면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감시 강화

기대효과

-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및 혁신성장에 기여

기업정보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안자

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서명: 경영혁신팀, 기금성과평가팀
 담당자: 홍성곤, 한호석
 연락처: 061-350-1303, 1273

분류

디지털 개방 / 재정 투명성

제안배경

- (배경) 정부의 강도 높은 부정수급 근절계획에도 어금니 아빠 사건 등 부정집행 사례 지속 발생*으로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만연
 - 민생분야 생활적폐 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 중
 - * 권익위 부정신고센터 신고접수(건) : ('16) 593 → ('17) 960 → ('18) 1,443
- (현황) '20년부터 ICT분야 재정사업(1조241억원)을 통합관리 함에 따라 정부예산의 부정집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
 - 또한, 사업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 간소화도 함께 추진

제안내용

- 기업정보를 활용한 부정수급 사전·사후 집중관리로 정부예산 투명성 확보
 - (사업前)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실시간 제공되는 기업정보로 지원기업의 재무·신용정보 등 확인 후 협약체결
 - (사업中) 24H·365D 5단계*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채무불이행, 휴·폐업 등 발생 시 즉각 경보알람으로 현장실태조사·사업비 지급 중단
 - * 정상/관심/관찰/휴폐업/부도
- 민관 기업정보 협조체계 구축으로 행정서류 제출 대폭 축소

-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 KCA(PMS), (주)한국기업데이터(기업신용정보) 간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자 행정서류 제출 대폭 축소 추진

기대효과

- (국가재정 누수방지) 관심·관찰 등 의심사업자 대상에 대한 밀착관리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 ※ '19년 신용등급 급락 사업자 17개 검출 및 34억원 재정 투명성 확보
- (수행기관 편익제공) 기업정보 공유·자동화처리를 통한 수행기업의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9종→4종)로 시간적·경제적 편익*제공
 - * 0.8M/D(Man Day, 1인 1일 시간 업무량), 122백만원 절감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한국기업데이터)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있음 (내용 :)

시민이 주변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적용하며 사회문제 해결

제안자

기관명: 과기정통부
담당자: 김의중

부서명: 공공기술기반팀
연락처: 044-202-4636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차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년)」에 따라 41개*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SD 사업 추진 중
*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생활폐기물, 먹거리안전, 교통안전, 불량·노후 주택 등
- 주로 사회문제 이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현장 실증, 시제품 제작 등을 수행, 지역현장 특화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범부처 협업 미흡 등으로 국민 체감 한계
*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대부분이 개별 이슈 대응에 치중(90.9%, 1594건, NTIS)
◇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 위하여 연구자와 수요자가 함께 문제정의부터 보급·확산까지 함께 참여 필요
* 국민생활연구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관리규정 제7조 6항 신설('19.3월)

제안내용

-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수요자가 함께 문제정의부터 보급·확산까지 문제해결 쉰단계에 함께 참여하는 체계 강화 필요
-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아닌, 지역에 특화된 기술개발·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기대효과

- 주민, 사회적 조직, 부처·지자체 등 다양한 수요자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 도출
 - 단기성과·목표 중심의 R&D체계를 전환, 국민·지자체 등이 적극참여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국민 삶의 질 제고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제안자

기관명: 해양경찰청
담당자: 장도선

부서명: 혁신팀
연락처: 032-835-2206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정책 속의 과정을 위한 국민참여형 플랫폼 구축 필요

제안내용

□ 추진방향

○ 정책 과정별 국민참여 제도 도입 및 연계운영, 즉 '심사숙고형 정책추진 방식'을 우리청 內 원활하게 정착하여 정책 내실화 추진

-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 국민소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 (정책 결정 및 평가) 해양경찰위원회*, 국민만족도 조사 시스템**

* 해양경찰법 시행('20.2)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규 구성·운영

** 정책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 민원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신규 구축·운영

□ 세부 추진사항

○ (정책입안) 소통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정책제언 도출시 소관부서 검토 후 정책수립, 파급효과가 큰 경우 해양경찰위원회 안건* 상정

○ (정책결정) 상정된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의결 (또는 보고) 등을 통해 실질적 심의 및 정책결정 지원

※ 해양경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정책 방향 수정 후 입안

○ (정책평가) 국민만족도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양경찰 접촉고객 대상 해양경찰 정책분야별(해양사고, 범죄단속, 해양오염 등) 평가

※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20.5) 이후 실시간 조사 이행('20.下)

기대효과

- 정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하고, 주요 정책들의 일관성 유지 가능
- 심사숙고형 정책추진 방식 정착

하의상달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분류

반부패 /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배경

- 제가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말한 스위스의 정치 시스템이 인상적이어서 이 안건을 제안드립니다.
스위스는 주민이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게마인데는 칸톤(주정부)을 감시하고, 칸톤은 연방정부를 감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모든 칸톤의 독립지위 보장하고 별도의 입법·행정·사법부 갖추고 있어서 의회가 있어도 주민전체가 입법부 국민발안을 통해 헌법 제정·폐지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정치시스템을 가진 한국과 달리 주민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패를 줄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내용

1. 헌법 개정을 통한 한국의 지방 분권화 시스템을 확실히 구현

결정권자들이 소수이고 위에 있다면 많은 부정 부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로비는 결정으로 인한 이해 관계 때문에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물로 시스템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분권화로 결정하는 주체를 작은 단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이 되어야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이 좀 더 결정에 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같은 경우, 지방 분권화 시스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 권한이 지방으로 100% 이양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 교육, 건강관련 업무, 공간 및 토지이용(도시계획)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들은 지방에게 그 권한을 100% 위임하여 사이즈가 큰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결정에 대한 주민 견제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2. 주민 발안제도 실시

스위스의 주정부에서는 칸톤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폐지를 ‘국민발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발안의 안건을 칸톤의회가 부결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구역, 자신의 이익과 행복이 직결되어 있는 곳을 위한 결정은 주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위에서 로비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다수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결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도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고 빠르게 결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문화, 건축·환경, 법무·안전, 재정·복지, 내무·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민발안제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 의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소수당의 의견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 지방분권화 시스템을 헌법개정을 통해 확실히 구현하고 주민 발안제도를 도입하여 아래로부터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치 부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주민발안제로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관련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신속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재정 투표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못한 얘기들

- 전문가도 아니고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시민과 함께 행정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안부

제안배경

- 지자체 내에는 각 분과별로 전문가 및 단체 소속의 분과위원들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개적인 참여의 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사실 일반 시민들보다 더 모르고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시민의 알 권리나 여타 지자체의 행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2명의 기관장이나 다른 분들의 추천이 아닌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관이나 여타 단체의 장들만의 지자체관련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 시, 군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 매 각 지자체 과별 분과가 있는데 시민에 대한 자리도 명시해서 지자체 구미에 맞는 분과위원들을 임명하지 말고 공고를 통한 시민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자체 행정과별 시행내용이나 기타 안건 관련 분과위원으로 일반시민도 참여를 당연직으로 하도록 하자는 취지.
- 공무원들이나 지자체장과 관련 있는 단체장들의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일반시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제시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 행정의 들러리로서 거수기 역할 및 자문기관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가치나 그 지자체 및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일반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듣고 의견 반영을 하면 더 투명하고 올바른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더 높아지고 행정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나 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더 적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 개방적인 공모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참여의 장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약사업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제안자

기관명: 광주 북구
담당자: 유채민

부서명: 기획조정실
연락처: 062-410-6050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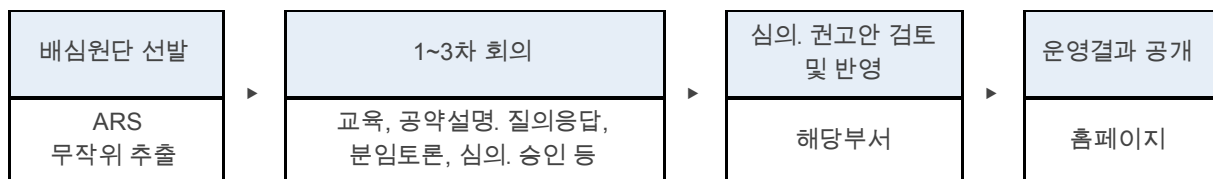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공약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 참여방식 개선
-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약의 수립과 집행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신뢰성 제고

제안내용

- 공약사업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 대 상 : 만 19세 이상 북구 주민
 - 구성방법 : 성별, 나이, 지역,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선발(ARS 활용)
 - 주요내용 : 공약이행평가 및 개선 권고, 공약조정안 심의, 승인 등
 - 운영절차



기대효과

- 지역 주민 중심의 의견수렴 가능
- 성별·나이·지역·인구비례에 따른 구성으로 주민의 대표성 확보
- 공약 수립부터 시행까지 공약 추진과정 전반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체감도 및 신뢰성 제고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누구나 정치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제안배경

- 컴퓨터를 사용하는 세대는 국민청원을 통해서 자가의견을 개진하거나 생각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기도 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선거 또는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국민청원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정치참여에 언제나 수동적으로 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가의견을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러한 제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 각각 읍면동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정치국민청원함을 설치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분들에게 정치참여에 기회를 주고 좋은 아이디어나 실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거나 지자체에 행정업무에 반영하는 등 어르신들 의견을 행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의견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점은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어르신분들도 더 활발한 사고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까지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그동안 국민청원, 신문고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정치 메카니즘이 늘어남에 따라 정치적 소외를 느꼈던 어르신분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못한 얘기들

- 정치참여 하는데 있어서 남녀노소 연령불문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플랫폼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참여민주주의의 기반 강화

제안 배경

시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다방면의 정부혁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행정부의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빠른 집행을 요구하는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현장에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시민들과 함께 의제를 제시하고 숙의를 거치는 참여 민주주의, 정책 공론장의 폭이 넓어져야만 한다. 행정 부서의 정책안을 피드백하는 동시에, 당국보다 우선적으로 핵심 의제를 의논하여 제시하는 적극적인 참여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두 번의 공론화 위원회 플랫폼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대학입시제도 변경에 대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를 시도한 바 있다. 공론화 위원회의 숙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높은 관심을 참여와 의견 개진으로 모와내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책 설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적극행정의 기반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를 상설화시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숙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이미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정부혁신 국민포럼’이 운영되고 있지만, 홍보 실태와 성과는 미비하다. 때문에 현재의 플랫폼을 내실화하여 국민 참여와 숙의의 실질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 모색을 제안하는 바이다.

제안 내용

제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홍보 강화를 통한 숙의 플랫폼 접근성 확충
2. 시민 교육 연계를 통한 숙의형 시민역량 강화
3. 포럼 위원 내실화와 정기 포럼/세미나를 통한 아젠다 및 정책안 발굴 역량 강화

주요 내용, 실천 방법:

- ‘온/오프라인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과 ‘정부혁신 국민포럼’ 통합 및 확대를 통한 플랫폼 내실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포럼의 목적과 지향성 모두 ‘국민의 집단지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숙의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부혁신’ 등 대동소이하나, 두 포럼의 낮은 홍보도와 운영 상황 미비 등으로 효과적인 기능이 부재하고 있음.

- 근로환경의 안전문제 등의 민생 사안, 검찰개혁 등 국가기관 및 제도 개혁 사안,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사회경제복지 사안 등 국민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관심 갖고 있는 정책 사안은 다수 존재함.

- 행정 과정에서 실행되는 세부적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의 참여를 통한 피드백 창구가 필요함.

- 현재의 플랫폼을 통합 및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적 어젠다 숙의와 정책 참여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소셜미디어서비스, TV 및 신문 매체,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포럼 참여 독려의 확대, 앱 개발을 통한 접근성 증진

- 두 포럼의 홍보가 각 포럼 사이트에서의 자체적인 홍보와 지자체, 대외활동 란,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한해 미비하게 이뤄져 왔음.

-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위원 모집의 확대가 필요함.

- 포럼 참여 앱 개발을 통한 접근성 확보

• 시민 교육과 정책 설명, 정책 집행과정 공개 등의 장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교육, 시민교육강의, 학급 평의회 등의 청소년 정치행정 교육 시스템 확보

- 민주주의의 공교육, 정치교육 및 토론 등의 시민들의 정치행정 교육 기능 부과

- 정책들에 대한 피드백 및 정책집행 과정 공개, 정책 소개의 장으로의 기능 활성화

• 정기 세미나, 포럼 등의 오프라인 공론장, 각종 공모전 추진 등으로 국민 참여의 기회를 다양하게 넓여야 함

- 여러 사안 또는 어젠다에 대한 온오프라인의 공론장 형성과 숙의를 도모하여 다양한 국민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어젠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이 수렴되고 부처의 정책 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같은 타운 홀 미팅이 세미나, 포럼, 공모전의 형태로 운영되어 국민의 행정참여 효용성 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함.

• 각종 중앙/지방 행정 부처의 국민 제안 청구 연계성 증진

- 키워드 분석을 통한 기존의 정책제안 여부, 정책 시행 여부 검색 기능 확보

- 분산되어있는 정책 제안 창구 연계 링크 확보 등을 통해 접근성 강화 도모

기대 효과

•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숙의형 참여 민주주의 내실화

- 정책 어젠다에 대한 토론 활성화

- 사회적 현안에 관한 공론장 확보

- 다양한 의견의 수렴 장소 마련을 통한 사회적 통합 기대

• 숙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 축적

- 정책 숙의의 과정과 결과 자료의 공개 및 데이터 축적

- 향후 정책 설정 및 조사를 위한 데이터 참고 플랫폼으로서 기능
- 행정서비스, 정책집행과 관련한 정부-시민 간, 세대 계층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 행정 및 정책의 투명성, 신뢰도 제고
-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행정 및 정책의 점검과 시민의 의견 반영 시도
- 국민속의 반영 노력을 통한 정부기관의 혁신 고취
- 민관 거버넌스의 실질적 기능화

“주(住)민에서 주(主)인으로” 사람중심 시민자치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담당자: 이용훈

부서명: 주민자치과
연락처: 062-360-7235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주민자치회 단계적 전환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 발전방향 및 현안 토론으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마을 곳곳의 주민의견 수렴

제안내용

- 주민자치회 단계적 전환 및 기능 강화
 -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등의 활동으로 실행력이 검증된 주체 참여 유도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핵심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협업체계 강화
- 마을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총회 활성화
 -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마을 민주주의 본격화

기대효과

- 주민자치회 전환 및 기능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으로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
- 온라인, 오프라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하여 주민총회 안건 발굴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참여
- 학교총회 확대 추진으로 청소년,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주민자치회 운영洞 실무협의회 / 주민자치회 회장 및 사무국장, 동장 및 주민자치실무담당 등 참여)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교환)

지역형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리빙랩

제안자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담당자: 문성호

부서명: 제주시 자치행정과
연락처: 064-728-8692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주민 주도의 새로운 실험(리빙랩)과 상호 학습. 확산이 이루어지는 ‘문제해결 복합플랫폼’ 운영으로 지역내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 필요

제안내용

- 지역의 혁신활동 결집 플랫폼으로서 소통협력공간 조성
 - 소통협력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수요 모니터링을 통한 목적형, 기능형 프로그램 공간 조성 추진
- 지역사회혁신가 발굴. 육성 추진
 -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혁신가 및 자원 발굴. 연계
-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
 - 공간 자원을 이용하여 여러 주체들이 모여 다양한 실험과 협력을 도모하는 혁신활동 실험실 운영
- 지역밀착 생활실험(리빙랩 지원)
 -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한 생활실험 프로젝트 발굴. 지원

기대효과

- 해결주체의 다변화(주민참여 협력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문제해결
- 지역별 고유한 문제의 발견. 재정의,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제고

- 주민주도, 주민참여과정 문제해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리빙랩 조성. 운영

제안자

기관명: 부산광역시
담당자: 신창배

부서명: 조직담당관
연락처: 051-888-1124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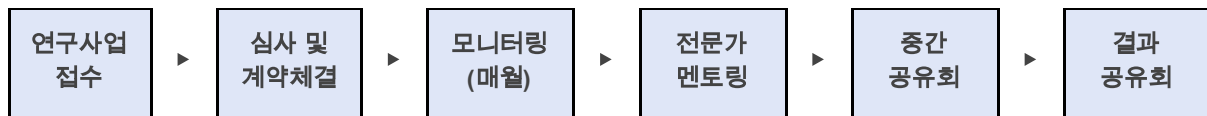
제안배경

- 오늘날 사회전반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 정책 및 기술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리빙랩 추진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방법 도출
- 특히, 리빙랩은 시민들이 생활하는(living)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이라는 뜻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와 의제발굴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여 참여 가치 극대화

제안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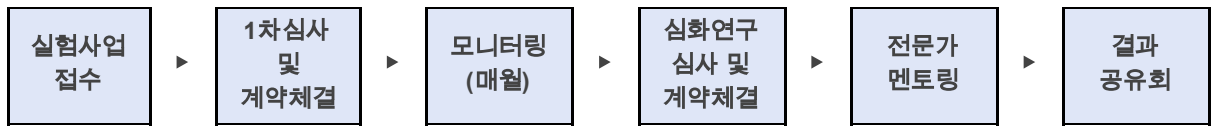
- 청년연구자 프로젝트 : 다양한 청년이슈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원하여 청년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구데이터 축적 도모

[사업진행절차]



- 청년생활실험 프로젝트 :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찾고, 대학, 전문가,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도모

[사업진행절차]



- 청년리빙랩 공간구축 : 청년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혁신 연구실 운영

사회 전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제안자

기관명: 여성가족부
담당자: 박혜원

부서명: 여성인력개발과
연락처: 02) 2100-6219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우리나라는 경제적 규모 대비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미흡하고,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부족 등 유리천장 현상 지속
 - * 한국은 첫 이코노미스트지 발표 유리천장지수 29위로 8년 연속 최하위(여성관리직 : 한국 14.5%, OECD 평균 32.5% / 여성임원 : 한국 3.3%, OECD 평균 25.4%)
 - 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한 대표성 제고는 우리사회의 다양성·포용성 강화를 통해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가치 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해 선도적 노력을 이행 중에 있으며 이를 더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 추진 필요

제안내용

- (공공부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18~'22) 내실있는 이행을 통해 공공부문 각 분야 여성참여 및 대표성 제고 기반 강화
 - 매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반기별)을 통해 목표달성 관리

< 12개 분야별 '22년 달성목표 >

- ▶ (고위공무원) 10.0% / (본부과장급) 25.0% / (지방과장급) 21.0%
- ▶ (공공기관임원) 23.0% / (공공기관관리자) 28.0% / (지방공기업관리자) 10.0%
- ▶ (국립대교수) 19.0% / (교장·교감) 45.0% / (정부위원회) 40.0%
- ▶ (군 간부) 8.8% / 일반경찰 15.0%(관리직 7.0%) / 해양경찰 14.4%(관리직 2.8%)

-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및 추진

- (민간부문)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를 기반으로 자율협약, 기업지원 등 추진
 - 기업이 스스로 여성 임원 확대 등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자율협약 체결
 - 기업 내 성별균형적 제도·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상장법인 여성임원 등 관련 실태조사·발표 등 정책공감대 확산

기대효과

- 공공, 민간 등 사회 전반 여성 참여 기반 강화
- 정책결정과정의 성별균형적 관점 반영과 직장 내 성별다양성 제고를 통한 사회전반 성평등 사회가치 실현과 공정가치 확산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공공부문 - 양성평등위원회

민간부문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실무협의회*

*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사업 관련 민-관 협의체로 대한상의 등 10개 경제단체와 여가부로 구성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 있음

(내용 :

공공부문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실적 관련 안건보고 등(단, 차관/국무회의 미상정 시 양평위 보고)

* 제9차 양평위에서 '19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완료('19.9~10)

민간부문 -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사업 관련 추진상황 및 성과 공유, 협의 등 진행)

성주류화 제도 정착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

제안자

기관명: 여성가족부
담당자: 이일현 서기관

부서명: 성별영향평가과
연락처: 02-2100-6178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 제도를 도입하여 '12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나,
- 성주류화 제도를 통해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체감도 제고 필요
-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체계 마련 및 민간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 필요

제안내용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민간 검토위원 등 컨설턴트 지원 강화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정책과 성평등 이슈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
-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성주류화 정책 전반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결과에 대해 정책환류
- 지역 내 주요정책에 대해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성평등 정책 개선
- 주민이 직접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역 정책을 평가·모니터링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발굴·제안

기대효과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강화를 통한 성별영향평가서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자체간 성주류화 역량 불균형 해소

- 주요 성평등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응 강화
-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여 효과 분석을 통한 예산 반영 확대
- 주민이 정책 환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성평등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

공공부문 여성·장애인 대표성 제고 등 균형인사 확산

제안자

기관명: 인사혁신처
담당자: 한송화

부서명: 균형인사과
연락처: 044-201-8383

분류

참여·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장애인 채용 기회를 확대할 필요

제안내용

- 공직내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공직생활 지원
 - 7·9급 장애인 구분모집 및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지자체 3.4%) 미달기관 점진적 축소
 -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무지원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공무원 등 대상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기대효과

-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장애인 채용을 선도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 및 포용적 국가 실현에 기여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균형인사협의체)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내용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외교정책 관련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국민외교 시스템 활성화

제안자

기관명: 외교부
담당자: 정혜주 외무사무관

부서명: 지역공공외교과 국민외교팀
연락처: 02-2100-8279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정부의 운영방식이 정부와 국민의 협치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외교에 있어서도 국민의 역할과 참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도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제안내용

- 외교부는 온·오프라인 국민외교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를 증진하는 다양한 국민외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외교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제안이 외교정책 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대효과

- 외교부는 온·오프라인 국민외교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를 증진하는 다양한 국민외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외교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제안이 외교정책 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법령, “국민참여심사제” 운영 내실화

제안자

기관명: 법제처
담당자: 이민주

부서명: 법령정비과
연락처: 044-200-6574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그간 법령안 심사는 주로 정부 부처와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심사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정부입법의 민주성 및 현장성 제고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현장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 심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견 제시

제안내용

- (대상법령) 법령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관 법제관실에서 국민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안 선정
- (참여자) 법령안 관련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일반 국민
- (운영방식) 정부입법의 법제처 심사 시 법제처(법제관), 소관부처 및 참여국민의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집행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 참여자 편의를 고려한 서면심사 등 다양한 형식 활용

기대효과

- 국민 주변의 불편·불합리한 사항 또는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을 발견하여 생활 속 불편 해소
-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제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법령 마련

-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법령 심사의 현장성 제고

주민체감형 디지털 지역혁신 추진

제안자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자: 이성은

부서명: 주민참여협업과
연락처: 044-205-3449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새로운 지역 사회문제의 등장과 새로운 혁신방식에 대한 요구 증대
 - 정부 주도·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일회적인 지원을 벗어나 민관협력·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 필요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디지털·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를 활용한 복잡·다양한 지역 문제의 해결 가능성 증대
- 수혜대상
 - 직접 : 25개 과제 수행 참여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약 250여명)
 - 간접 : 유사 문제를 경험하는 지역주민 모두

제안내용

- 목표
 - 주민의 정책 및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확산
 - 주민·전문가·공무원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 이해도 및 공감도 향상 및 디지털·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역량 강화
 - 문제해결 기획 모델 발굴 및 문제해결 노하우와 지식 공유·확산
- 주요 내용 및 실천 방법
 - 디지털·과학기술 기반의 현장문제 해결 민관협력 공모사업 추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격차, 시민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기반 공모사업* 추진

* 지역격차완화(민간 공모, 8개 과제), 시민안전확보(지자체 공모, 3개 과제), 공감e가득(지자체 공모, 5개 과제)

- 주민·지자체와 과학기술 연구자가 직접 소통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부처협력 공모사업 추진

* 행안부·과기부 협력 연구자 및 지자체 공모, 10개 과제 : 기술개발은 과기부 지원, 기술적용·확산은 행안부 지원

○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다양화

- 지역문제 해결사업의 주민참여 확대와 실질적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스로해결단’ 필수 운영

- 과학기술 연구자와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기획부터 기술개발 및 후속 적용·확산까지 함께 소통하며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문제기획리빙랩’ 운영

- 사업 공모 추진 시, 주민·지자체와 연구자가 지역 현안 및 기술개발 제안 내용 등을 상호 공유·소통하는 ‘만남의 장(오픈테이블)’ 마련

○ 중앙부처 간, 부처-지자체 간 협력기반 강화

- 행안부의 지자체 및 지역주민 소통체계와 과기부의 과학기술·ICT 전문성을 연계한 부처 협업사업 추진

- 행안부·과기부는 기술자문단이나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주민참여 및 현장적용을 뒷받침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기대효과

○ 민관협력 및 소통체계 마련을 통해 정책·사업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권·자기효능감 증대와 주민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

○ 기술전문가·연구자 등과의 문제해결 공동수행으로 주민의 디지털·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이해도 및 역량강화

○ 디지털·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성과 공유·확산을 통해 공통적인 지역문제를 경험하는 주민·지자체의 문제해결 지원

기후위기 대응-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환경부, 국토부, 재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제안배경

1. 한국의 코로나 대응전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롤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기후위기대응에 대국민 소통전략에 응용
2. 코로나 위기는 기후위기와도 상호 연관되어 있고, 글로벌한 과제이지만, 국내에서 정부부처, 기업, 국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기를 메르스 기를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업그레이드 했듯이, 기후위기에 대한 전략도 코로나 위기 노하우를 활용하고 업그레이드 시켜 성공시킬 수 있다
3. 이로 인한 수혜자는 대한민국 국민, 기업이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4. 한국의 기후위기 모델이 전세계로 공유되어 글로벌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안내용

- 목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 이행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어 낸다.
- 정책:
 - 기후위기 관련 전문가단체와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체 구성하여 한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향후 대응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 논의된 정책을 각 부처에 전달하여 구체화한 후,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축한다.
 - 특히 기후변화는 차세대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기 때문에 청년그룹이 기후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 기후위기도 이번 코로나 감염 map처럼, 즉시적으로 이산화탄소량과 온도변화로 인한 피해와 대책에 대한 콘텐츠를 app을 통해 전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 각 기업도 기후변화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정부는 이 내용을 전국민에게 공유한다.
-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알린다.
- 기후위기도 디지털라이제이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IT 강국임을 다시한번 전세계적으로 알린다.

기대효과

-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보건건강에 긍정적인 효과
- 탈이산화탄소 및 친 환경적 삶의 형태에 맞는 산업정책으로 새로운 노동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코로나 사태와 유사한 각종 바이러스감염이 향후 더 자주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산업 경제 사회정책이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책이 새로운 산업의 구조조정에 단초를 제공한다

기타/못한 얘기들

- 환경 및 기후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이외에도 한국투명성기구,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올릴 예정이다.
- 현행 미세먼지 수준을 알리는 소극적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국민과 각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 쓰레기 데이터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예산 집행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환경부, 지자체

제안배경

4월 22일, 오늘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8만 톤의 쓰레기 섬 (Great Pacific garbage patch, GPGP)이 떠다니고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모습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더이상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되었던 한국산 쓰레기 5100톤이 최근 반송되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이 하루아침에 쓰레기 산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 언택트 소비가 활성화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안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활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쓰레기 문제에 아직 미온적이고 시민들의 선의와 시민의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쓰레기 관련 데이터를 마련 및 공개하여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쓰레기 관련 세금을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예산 활동 투명성 또한 제고해야 합니다.

제안내용

국내 다세대주택은 260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190만 가구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다세대주택 특히 지방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체 쓰레기 분리수거 박스가 설치된 다세대주택이 있지만 대부분 건물 앞 공간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취생, 사회초년생, 젊은 부부들은 생활 쓰레기 비중이 높은 언택트 주요 소비층입니다. 쓰레기가 집 앞에 쌓여있고, 주변 건물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는 위협적인 사인과 CCTV가 설치된 불쾌한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리되지 않고 쌓여있는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를 비효율적이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세대주택에 적합한 쓰레기 분리수거 박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지역별 인구대비 쓰레기 배출량을 데이터화하여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집행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효율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커피숍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금지, 우산 비닐 사용을 대체한 우산건조기 사용 등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벗어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쓰레기 문제와 해결에 대한 취지, 사회적 가치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특히 쓰레기 문제 해결에 따른 공공 이익이 중요한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주변 공터나 임야에 쌓여가는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특히 배달 업체에서 제공하는 생활 쓰레기는 정부에서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시민이 주도적으로 배달 업체의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실천함으로써 공공이익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쓰레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생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정부는 쓰레기 배출량을 데이터화 하고 쓰레기 처리 방법에 따른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기타/못한 얘기들

기술발전에 따라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위생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영향평가과,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제안배경

(배경)

- 현재 인구의 약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시설 또한 특정 거점별로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인구는 더욱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며,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원도 집중화 및 오염물질의 고농도화 되어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인구, 환경, 교통, 부동산가격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국가 환경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데이터 기반의 현실성 있는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역 환경에 대한 정량적 지표의 부재
 - 누적환경영향평가의 관리 부재
 - 소규모 개발 난개발의 실효적 방지책 부재
-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환경정보 관리 및 활용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개발 주체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발주를 통한 수행으로 개발 주체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및 부실 평가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생태환경 중심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벗어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의 강화 필요

(목적)

- 환경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건강권 확보, 소규모 난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환경악화를 방지, 획일화된 도시개발에서 탈피하여 지역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설계로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개발을 유도, 산업시설의 분산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

제안내용

- 지역 환경 정책의 실효성 확보 제도 마련
 - 가. 지역별 종합 환경지표체계 수립
 - 나. 소규모 개발 난개발의 실효적 방지 수립
 - 다.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주관하에 환경영향평가 수행(공탁제)

-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통합환경정보관리 체계 구축
 - 가. 노후된 PDF기반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지능형 환경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
 - 나. 파편화된 환경정보의 통합 활용 기반 플랫폼의 구축

기대효과

- 개발계획단계부터 친환경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환경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 생활 밀접형 생활환경 개선
-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기반 조성에 따른 데이터 기반의 환경정책 수립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확대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기타/못한 얘기들

정책결정자와의 공감대 형성 후 실무자와 논의 필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담당자: 서지우

부서명: 복지정책과
연락처: 062-350-4056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초핵가족사회로 기존 가족중심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 돌봄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안전망 필요
- 공공·민간단체별로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이나 기관별 소통 및 서비스 연계 부재, 각 사업에 대한 상호 이해도 부족
- 고독사 예방 관련 종합적·지속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론타워 부재

제안내용

- 고독사 예방사업 통합관리
- 고독사예방관 양성 및 배치(54개 민간단체 내 108명)
- 기관별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연계·제공
- 민·관 업무협약으로 위기상황 예방(열쇠업체, 장례식장 등)
- 기존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기대효과

- 고독사 예방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고독사예방관 양성 등을 통해 분산되어 있던 인적·물적 자원을 일괄 관리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도모
-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제고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 대표자들로 고독사예방위원회, 모니터링단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 협업체계 구축)

시민인권실천단 「광주인꽃지기」운영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담당자: 김양수

부서명: 민주인권과
연락처: 062-613-2064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인권 시민참여 및 계몽활동이 병행되어야 ‘도시전역에서 인권도시 운동 붐업 (Boom Up)’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 인권도시 시민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민이 자발적으로 생활속에서 인권모니터링과 캠페인 등 인권실천활동 전개 필요

제안내용

- 인권실천단을 구성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캠페인이 자원봉사로 인정받도록 지원하고, 추후 일반시민이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인권도시 구성에 기여하도록 발전방안 강구
-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선정하여 활동하되, 우선 장애인 이동권 분야에 집중하여 무장애도시 운동을 선도하도록 제안
※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여부 점검 등

기대효과

- 인권모니터링은 통해 인권침해 제보보다는 정책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회 조성
- 인권 활동 등 현장 인권캠페인 전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만들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일터 만들기」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담당자: 차경희

부서명: 민주인권과
연락처: 062-613-2502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성희롱 등 여성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우리 시의 경우 2018년 「성차별·성희롱(온라인)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25.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2차 피해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여성인권침해 구제 및 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
- 이에, 성차별·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가 모든 직원들의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있다는 문화 확산 및 실천운동이 필요함

제안내용

- 현장방문을 통한 여성인권침해 사전예방 강화
-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 조직내 2차 피해 예방 및 구제강화를 위한 부서 협업 추진
- 여성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와 대처방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안내서 제작

기대효과

- 여성인권길라잡이(사례집)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세부적이고 체감 가능한 가이드라인제시를 통해 전문성과 확장성 확보
- 공공기관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및 여성인권체감도 향상

주민 삶의 가치회복을 추구하는 인문도시 조성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담당자: 민숙현

부서명: 인문도시정책과
연락처: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점점 커져가는 도시의 문제(소외, 쓰레기, 공해, 등지내몰림 등)를 해결할 열쇠 → ‘인문정신’
 - 인문정신에 기반한 공동체 운영으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주민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제안내용

- 인문적 도시환경 구축과 주민의 인문적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도시개발 및 경관을 포함, 인문적 환경을 고려한 건축 및 건설
 - 동구의 인문자산 및 마을과 주민 일상의 기록에 관한 사항
 - 생태환경 구축을 위한 공원 등 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외
 - 구 정책에 대한 주민의 민주적 행정참여에 관한 사항 외
- 인문동아리 구성 및 활동 활성화, 인문 순례길 개발

기대효과

- 구정 정책에 인문도시와 연계하는 체계 정비
- 인문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해 지역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활력 증진
-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인적인 발달 도모
- 주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인문도시 조성
- 인문활동 활성화로 인문정신 문화 확산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내용 : 전문가 회의, 공무원 TF 운영, 주민설명회)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

제안자

기관명: 광산구
담당자: 신호섭

부서명: 안전관리과
연락처: 062-960-3936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도시가 발전하고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官주도, 공공부문의 역할과 대책만으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욕구 수준을 충족시키는데 한계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섬세한 안전 보장을 위해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민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제안내용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민관 합동 안전망' 구축
- 현장중심형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 생활안전 역량 강화 수요자 맞춤형 시민 안전교육
- 근원적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안전관리 시스템화

기대효과

- 수요자(시민) 중심의 점검활동
- 생활 속 안전취약 시설 등 사각지대 점검

임직원의 이해충돌 자가진단제 시행

제안자

기관명: 우체국금융개발원
담당자: 박준희 과장

부서명: 감사실
연락처: 02. 2639. 0875

분류

반부패 /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공직자 개인 차원) 모든 임직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임무·기능 등을 수행할 때,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 (공공기관 차원) 이해충돌은 뚜렷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기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함으로써 공공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제안내용

- **(제도목표)** 우체국예금·보험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지배·회피 등)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운영방식)** 모든 소속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 수행 전에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또는 사익추구의 위험성을 조기 제거(아래 흐름도 참조)

| | |
|-----|--|
| 1단계 |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직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을 파악 |
| 2단계 | 실제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직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자를 파악 |
| 3단계 | 실제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 |
| 4단계 | 제3자 입장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 |

기대효과

- (신뢰 확보) 추상적·윤리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이해충돌 개념을 제도화·규정화하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직무 수행에 따른 국민의 신인도 제고 달성
- (적극행정 도모)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각 직무별·지역별 이해충돌 상황을 지배하여 소속 임직원의 적극행정 저변 확대 및 소극행정 답습 철폐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갈등관리 체계 확립

제안자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담당자: 고영찬

부서명: 소통담당관
연락처: 064-710-3402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공갈등 급증으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
- 갈등조정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성 확대,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

제안내용

- 예방측면의 갈등관리 기반조성
 - 제도적 기반마련, 전문가 채용, 정책자문위원 운영, 공직자 역량 강화, 중점관리대상 등급지정 운영
- 관리측면의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갈등영향분석 실시, 사회협약위원회 역량 강화, 갈등관리 실태평가

기대효과

-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공감대는 높지만,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갈등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주민인시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갈등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갈등해결 및 조정요구에 대한 대응력 향상
- 협력과 공존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갈등관리 체계 확립

(141~143) 민관협업을 통한 경험기반의 청년정책참여 플랫폼 구축(Public choice for Better World)

141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청년옴부즈만 제도 도입 확대

142 청년세대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공영역에 대한 평가와 실천

143 폭넓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적 미래지향적 접근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 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제안 배경

혁신정부와 신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세대가 공공분야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도 부족하다. 향후 우리나라를 만들어갈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설계해나갈 기회와 토대는 부족하기만 하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스템에 관해 청년의 시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그 미래에 관해 구상하고 설계하며 평가하는 일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의 미래세대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방관자적 소극적 수혜적 소비자적 처지에만 머무르고 있다.

청년들은 고답적 이해당사자적 시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기존의 틀과는 새롭고 융통성 있는 관점으로 여러 분야에 접근할 수도 있다. 우선, 청년의 기준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면서 축적되는 실제 경험사례들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공론화를 꾀해가면 어떨까? 이 과정에서 공공분야에 대한 미래세대의 실질적인 니즈 파악과 현 체계의 점검작업도 아울러 시작하면 어떨까? 민관 모두에게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플랫폼 방식을 통해 더욱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의 운영과 구축을 향한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실천적 운동을 본격화하면 어떨까? 바로 이 같은 공공서비스의 프로슈머적 문제의식과 필요에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다.

제안 내용

- 제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청년옴부즈만 제도 도입 확대 (141번)
 2. 청년세대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공영역에 대한 평가와 실천 (142번)
 3. 폭넓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적 미래지향적 접근 (143번)
- 주요 내용, 실천 방법:

-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청년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통한 청년의 정책참여 경험 확대
 - ※ 행정개혁시민연합은 2016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NH공사 등의 공공기관 청년옴부즈만 제도를 기관과 협업. 운영하여 청년들이 학업과 병행하여 사전교육, 현장답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 청년일자리,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등 청년시각에서의 사회적가치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숙성과정을 거쳐 과제 제안, 성과 공유, 평가하는 청년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민간의 청년참여 프로그램의 연계: 예) 행정개혁시민연합 프로그램 (행정현장학교, 청년 옴부즈만)과 부설기구(영포럼)의 조사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자료를 제공
-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정책 자료, 청년옴부즈만 참여자들의 경험 사례 등 제공
- 경험 기반의 주제 공론화와 공공기관 평가
 - 옴부즈만 활동 유경험자들의 데이터(오프라인 경험)를 기반으로 하는 주제 공론화, 대안 제시, 정책 제안
 - 축적된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참여자들의 공공기관 모니터링 활동과 청년 관점의 정책 제안
 - 플랫폼 참여자들 간의 피드백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상)
 -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청년들의 정부기관 평가와 시상
- 국내 주요 사회 현안의 공론화와 해결 방안의 실질적 모색
 - 국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청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플랫폼으로 활용
 - 실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과 실천 단계까지 이행
예) 디지털 격차 문제: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해결 실천
- 세계 청년 시민과 연대와 협업을 통한 범지구적 문제 해결 논의
 - 우리나라 OGP 청년 워킹 그룹의 활성화 -> 타 국가의 ogp 청년 워킹 그룹 확대
 - 각 국가별 청년 워킹 그룹 구성원들 간의 커넥션 도모
 - 국제적 차원의 뉴거버넌스 구현

기대 효과

-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한 뉴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의 실현
 - 경험 기반 모니터링에서 실질적 이행 단계까지 실천
 - 청년 수요 기반의 공공 플랫폼 구현
 - 정부-국민 & 국민-국민의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
-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공분야 데이터의 축적
 - 현장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데이터 제공
 -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교육 플랫폼으로서 기능
 - 공공기관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정부-청년 간, 세대 계층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 공공기관 평가의 투명성 제고
 - 청년(미래세대) 관점을 강화한 평가로 공공기관에 관한 다각도 점검과 정비 시도
 - 청년 평가 국가실행 계획 이행을 통한 기관의 적극적 개선 의지 고취
 - 민관협력의 상호보완적 선순환
- 국내 사회 현안의 실천적 해결
 - 공공기관 이외의 사회문제 관련 청년들의 의견 교류와 실천

유치원 및 육아 데이터 활용 방안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지자체, 교육부, 여성가족부

제안배경

N포 시대에서 결혼과 육아 포기가 익숙한 사회가 되었다.

실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2019년)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6명은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하지 못했다. 더욱이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이후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에게도 한정된 인원으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서울 열린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유치원은 총 830개이며 원아 수는 총 78,009명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유치원 한 곳당 93명의 유아가 등록되는 숫자이다.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은 6,203명의 육아가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의 경우 350개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어 유치원 한 곳당 평균 17명의 육아가 등록된다. 반면 서울시 내에서 가장 적은 1,217명의 육아가 거주하고 있는 중구의 경우 14개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어 유치원 한 곳당 86명의 육아가 등록된다. 유아 대비 유치원 수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젊은 부부가 살고 싶은 지역이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그렇게 지역 편차가 생기고, 집값이나 기타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안내용

이에 유치원과 육아, 젊은 부부들이 거주하는 지역 데이터와 주민들과 함께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유아, 젊은 층 분포도, 유치원 개수 등의 데이터 활용과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다. 거주하고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처지를 대변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기대효과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힘들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개인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혹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경력 단절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해결할 수 있다.

- 특히 불신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젊은 가정들의 화목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부모가 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유치원이 생기고 가장 투명한 유치원 운영과 교사의 부담

해소가 가능하다. 나아가 지역의 편차를 줄이고 어디에서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학군, 보육 및 교육환경을 평준화하여 부동산 상승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또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타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안자

기관명: 기획재정부
담당자: 조선형

부서명: 혁신조달팀
연락처: 042-215-5642

응모분야

기타 - 공공서비스 개선

제안배경

- 공공조달은 정부 총지출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혁신 제품·기술의 선도적인 구매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및 혁신성장 지원 필요성
* 공공조달은 123조원으로 GDP의 7%(’18년)에 해당

제안내용

- 혁신구매목표제 도입 및 기관평가 시행
 - 기관별(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구매 목표로 설정
 - 혁신지향 공공조달 평가 지표를 정부혁신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기업·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 혁신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혁신제품 및 공공구매와 연계
 - * 혁신조달수요발굴 TF(4.20 출범)를 통해 현장수요에 대한 해결책 및 기존 R&D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구매와 연계
-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를 통해 혁신수요-혁신제품 간 매칭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혁신지향 공공조달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설명회 실시

기대효과

- 지속적인 수요 발굴 및 해결과정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

□ 공공부문이 혁신 제품·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되는 등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 및 혁신성장 지원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문화공동체

제안자

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문화유산교육팀
담당자: 장영기 사무관
연락처: 042-481-3150

응모분야

참여·사회적가치

제안배경

(추진배경)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한문화재 한지킴이', '문화유산국민신탁'을 통해 민간참여 육성·지원 및 민관협력 확산과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재보호 거버넌스 구축과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속

* World Giving Index(2016) 기준 한국의 자원봉사참여율 18%, OECD 34개국 평균 24%

(필요성) 기존 정부 주도식 문화재보호 정책에서 민-관-산-학 협력체계의 참여·협력적 거버넌스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다각적 협력 및 지원 필요

(수혜대상) 국민, 문화재지킴이단체, 문화재소유자 등

제안내용

(목표) 사업수행의 의사결정, 권한,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고자 문화재 NGO·연합회, 문화유산국민신탁, 민간기업, 학교 등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상시적인 소통·협의·조정 체계 구축 및 파트너십·네트워크 활성화로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

(주요내용) 자원봉사 기반 시민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기업후원 및 협업개발 활성화, 파트너십 강화 등

(실천방법) 문화재보호 자원봉사·사회공헌 등 거버넌스 참여·협력의 지원, 캠페인, 협력사업 개발, 국제교류 지원 등 매칭 추진

- 문화재보호 현장 활동, 미래인재(청소년·청년) 육성, 문화공동체 지원
-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문화재지킴이날(6.22.) 등 참여환경 조성 및 홍보·캠페인
- 기업 후원·협력, 사회적기업 등 참여 확대로 사회적 자본 축적 및 공공성 강화

기대효과

(국민자존감 상승) 시민의식 자존감 성숙으로 문화재보호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증가되어 포스트 코로나의 선진모델 사례로 제시

- * 「2019 사회공헌백서, 대한민국 사회공헌 지형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 . 대국민 사회공헌 체감도 ‘한국을 좋은 사회로 만든 영향’ 부문 긍정평가 87.5%

(민관협업, 재정경감) 민간기업의 후원의 경우 연 35억원 절감 효과

- 인간문화재 건강검진, 궁궐목조건물 흰개미탐지 등 민간우수자원 활용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특)문화유산국민신탁)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없음 있음 (내용 : 민간협업 활성화, 기업후원 연계)

함께 알아가고, 만들어가는 정부

응모분야

재정투명성

함께하고 싶은 부처

어느 부처를 골라야 될지 몰라서 공란

제안배경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아직도 많은 시민분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부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현 상황에서도 어느 부서에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하는지조차 헛갈리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정부의 조직도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과정 중에도 정부의 조직도를 배우고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아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야 아이디어를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국민을 대표해 만들어져 있는 정부의 조직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면 그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그렇게 높아진 의식수준은 남녀노소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창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기타/못한 얘기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조직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앞으로 성장하는 세대들은 시대가 바뀔 만큼 더욱 열린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와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열린 마을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산업부

제안배경

추진배경

1. 부의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극심
2. 세대 양극화로 인한 청년빈곤이 향후 30년간 이어짐
3. 초고령화로 인한 노년빈곤 관리 필요성
4. 지방소멸
5. 환경파괴

제안내용

마을에서 빈곤 청년과 중년 노년층의 상생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마을기반의 친환경 핸드메이드 제작 및 제품판매 사업장 구축

기대효과

1. 일자리
2. 지속가능 마을경제
3. 친환경가치

기타/못한 얘기들

국가적인 거창한 사업제안이 아니라 소외되었지만 노동력이 있고 마을에서 사회적가치를 위해 노동과 가치를 전파할 인재를 꾸준히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들끼리 사기치는 사회가 아니라 똑똑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을기반의 친환경공동체사업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생활형 일자리 창출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고용노동부

제안배경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경기악화와 국내 내수시장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알바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서민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 상 정부 및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공개채용 및 공무원 임용 인원을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작은 일이라도 해서 가계재원을 늘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기반 일거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하며 수혜대상은 청년, 주부, 학생 등 일시적 금전적 재원이 필요한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많은 국민들이 적은 소득이라도 더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계소득 증가) 또한 이를 통한 따뜻한 서로 친밀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주요내용은 앱을 만들어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인데 전국지자체가 공동서버를 구축하여 어떤 가정에서 본인들이 하기 힘든 생활형 일에 쿨을 받으면 그 근처에 사람이 핸드폰 쿨을 보고 쿨에 응하면 5분안에 일을 올린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픽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일을 시킨 사람이 종료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모든 구인자는 사전에 자신이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신상정보가 정확히 입력된 사람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학생증명서, 계좌번호 등) 일의 내용은 설거지, 심부름, 아이돌보기, 대리운전, 비상구급차, 전구 갈아끼기, 도배보조, 페인트칠, 짐 옮기기, 청소 등입니다. (일의 종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시 카테고리화하여 선별) 그 후 일의 결과에 따라 별점수를 부여받고 부여받은 평가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하며 매달, 매주 우수실행자에게 리워드를 하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기대효과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하기에 주부 및 학생 등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에 어마어마한 창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역에서 일을 창출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여기에 일부10%정도 세금을 거두면 정부재원에도 큰 재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타/못한 얘기들

이 서비스를 작은 단위로 하는 것보다 전국단위 플랫폼을 만들면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기에 지역자치단체장들의 합의를 얻어 실시하는 게 어떨까 하며 앱 관리 및 서버 구축도 공동으로 하면 더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 예상됩니다.

뿌리기술 튼튼, 대한민국 뿌리 튼튼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제안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기술은 유럽에게는 기술력 차이, 중국 및 동남아에게는 단가경쟁력 차이 등으로 인해 수주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술자양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뿌리기술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자양성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근근이 매해 버티기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뿌리기술 튼튼, 대한민국 뿌리 튼튼"을 제압합니다.

본 공약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뿌리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제안내용

1.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뿌리기업은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로봇팔 등의 신기술 탑재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술자들의 유해화학물질의 접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 뿌리기술 전문 커리큘럼 제공

○ 뿌리기술의 전문교육을 정부지원을 통해 무료로 개방하고, 고등학교/대학교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재를 확보해 인력풀 형성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3. 인건비 정부보조금 지원

○ 외화유출을 최소화 하려면 외국인 노동자를 최소화하고 내국인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하여 정부보조금을 통해 뿌리기업 업종에 종사하는 젊은 인력에게 보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외화유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제조업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뿌리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뿌리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
2. 외국인 노동자 최소화를 통한 외화유출 방지
3. 젊은이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타/못한 얘기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뿌리기업들은 오늘 내일하며 근근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당장 폐업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되듯이 제조의 근간인 뿌리기술업종을 탄탄히 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방위사업청, 다파고(DAPA-GO) 실시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자

기관명: 방위사업청
담당자: 이상우

부서명: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연락처: 02-2079-1101

제안배경

- 방사청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간담회·토론회를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반영하는데 한계
 - * 개방된 공간에서 업체의 수출전략 및 애로사항 등 심도있는 논의
- 수출업체가 방사청에 직접적으로 수출과정에서의 애로를 전달할 수 있는 '1:1 소통창구' 마련 필요

제안내용

- 방위사업청장이 정기적으로 수출업체에 직접 찾아가는 '수출상담 다파고(DAPA-GO)' 실시
 -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현장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답변하고, 관계기관 협조 등이 필요한 민원은 방산수출진흥센터와 연계하여 7일 이내 답변

기대효과

- 기관장이 직접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업체의 혁신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 추진 가능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

제안자

기관명: 광산구
부서명: 기업경제과
담당자: 문성현
연락처: 062-960-8421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100대 국정 핵심과제 중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전략) 부문의‘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강화(중소벤처기업부)’
- 준비된 창업유도, 재취업·재창업 연계 등 폐업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중점 ※ '18.12.20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 ※ '19.9.10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 혁신형 소상공인(자영업자)으로 전환 및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혁신교육’및 지속적 추진 필요

제안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추진내용 :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교육, 특강을 통한 역량 강화, 개별 컨설팅 지원(기업주치의센터 연계) 등

-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강사 초청강연을 통해 교육의 관심도와 효과 제고
- ※ 외식업, 비외식업, 마케팅, 서비스(고객관리), 세무·노무, 창업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기대효과

- 스타 소상공인 육성으로 골목상권 동반성장 및 활력제고

혁신제품의 거래와 소통창구, '혁신장터' 운영

제안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혁신조달과
담당자: 김경희
연락처: 042-724-7530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은 급변하고 있으나, 공공분야의 혁신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연계할 방법 부재
 - * 기업은 공공기관의 수요와 요구사항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기관은 기업의 혁신제품 정보가 부족한 상황
- 혁신수요제기부터 혁신제품 제조·판매까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소통창구 필요
 - * 국가 R&D 결과물 및 상용화 전 혁신시제품 등의 혁신제품, 특허 등 각종 인증정보 등에 대한 모든 정보의 통합·제공 기능

제안내용

- 상용화 전 혁신시제품을 자유롭게 등록·거래하는 오픈마켓 운영
 - *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공공기관과 기업의 혁신제품 탐색 절차를 온라인화 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혁신제품에 적용한 신기술, 규격, 가격 등 제반정보를 제공하여 민간분야에서의 수요창출 유도

○ 도전적 수요발굴을 위한 국민·기업·정부의 소통창구 운영

* 혁신기술에 대한 수요·공급커뮤니티를 운영하여 국민·기업·정부의 소통 공간 마련

* 제기된 혁신 수요에 대해 전문가의 솔루션 제공 등 국민 참여 보장

*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 공공의 수요와 혁신 기술·제품 정보가 자동 매칭 되도록 고도화

기대효과

○ 수요·공급 커뮤니티를 통해 혁신수요와 기술제안을 매칭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대

○ 혁신장터 내 혁신제품전용몰을 활용하여 제품 정보와 유사 상품을 한 번에 파악

○ 공공의 혁신수요 발굴 및 기업의 혁신제품 연구 개발 활성화

노인요양원에 화상통화모니터 설치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재정기획부(참여예산)

제안배경

질병전염 (코로나 19) 유행시 가족, 친척 면담전면금지 되어있어 소통이 안됩니다. 전화통화로만 대화가 가능하나, 청각이 안 좋아 불가능한 분도 계십니다. 요즘과 같이 질병전염엔 방문조차 안되고 면회가 안되니 어떻게 지내는 지 알 수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가진 어르신이 거의 없고, 전화는 가능하나 사무실 전화로는 수월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부모님의 심리적 불안감과 자식들의 말할 수 없는 불효로 마음은 더 타가기만 합니다. 부모님을 뵈 수 없으니 보호시설 관계자와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어 가족불화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사회적인 일로, 집안일로 바빠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안내용

● 구체적 제안 내용

노인요양원에 화상통화모니터 설치(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요양원에 계신분들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한 노인요양원 수요처를 조사하여 각 노인요양원에 설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 노인요양원에 화상통화모니터 설치로 난청으로 대화가 안되는 어르신들을 얼굴이라도 보며, 가족들과 노인들의 외로움감소와 돌봐 주시는 시설기관과 신뢰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를 통한 노인들의 인권의 한부분으로 화상통화모니터 시스템설치로 사회적 가치와 공공혁신을 힘들어 하시는 가족들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기타/못한 얘기들

- 시의 적절하게 코로나 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도전, 한국' 긴급공모는 매우 공감이 되며, 행정안전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제가 현재 상황입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집안에서 넘어지시는 등 저의 친정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입소한지가 이제 8개월이 되어갑니다. 지난 보름날 (음력 1월15일) 생전처음으로 오곡밥과 나물을 해서 가져갔는데 면담조차 되지 않아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조차 볼 수가 없어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언 3개월이 다되어도 점점 더 코로나19로 만나 뵈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사무실 전화로 통화는 하나 귀에 보청기를 끼신 어머님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십니다.

- 게다가 시설요양원의 내방하여 어르신들의 말벗이나, 여가를 즐겨 주시던 강사분들도 전면 출입금지이다 보니 어머님의 기억력조차 안 좋아지시고, 실어증에 걸릴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 막내딸 이름을 물어보니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옆의 요양보호사가 되물으니 이름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도 없고, 하루종일 돌봐주시는 시설기관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도 됩니다. 가족이 그리워 울고 계실 어머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 공공요금 재정 절감 방안

응모분야

재정 투명성

제안배경

- 경로당, 마을회관* 등 각종시설의 전기료, 연료비 등 공공요금은 경로당, 마을회관에 직접 지원
- 이로 인해, 심야에도 난방 가동 등으로 예산 낭비 심화
- * 현황 : 경로당 (2018년기준 66,286개소), 전국 마을 (2010년 기준, 36,498개소)

제안내용

- 경로당, 마을회관 등 각종시설의 전기료, 연료비 등 공공요금은 고지서 청구 금액 만 지원
- 불필요한 공공요금지원으로 예산 낭비 근절

기대효과

- 공공요금의 재정낭비 절감 효과 극대화
- 재정 절감 비용으로 정부의 시급한 사업 추진 가능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제안배경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핵가족 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은 강화되고 있으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으로 미래비전이 부족하여 실효성 역시 미진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고령화 시대의 필연적인 도래로 인하여 사회보장 및 복지정책 역시 정부의 예산부담으로 가중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으로 근원적인 대책방안으로 안정적인 가족구성원들이 조화로운 3세대 동거가족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정책 역시 시스템적 연동정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 장기적 대안 마련이 가능합니다.

제안내용

-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 연동화
 - 출산장려 지원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 고령화 대책과 병행하여 저출산 정책을 연동하는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을 강화시킴으로써 노인세대의 안정적 주거확보와 동시에 자녀들의 돌봄 환경이 마련되는 안정적인 가족구성이 필요합니다.
- 3세대 동거가족 의미
 -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더불어 가족구성원들이 노인부양을 대체함으로써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의 안정적 기반조성이 가능하며 저출산 문제 역시 3세대 동거가족 기준 노령화 부모세대가 손자, 손녀들의 돌봄 서비스를 대체함으로써 맞벌이 세대에 대한 안정적 자녀 출산에 기반조성이 가능 합니다.
- 정부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
 - 노인복지와 저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의 한계는 예산부족은 물론 정책 콘텐츠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시적이고 정형적인 지원정책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며 중,장기적으로 해소정책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 정책방향의 전환
 - 저출산 문제와 노인복지 정책의 현행 정부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3세대가 공존하는 동거가족 지원정책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와 노인복지 해소 환경을 조성하는 가족중심 지원정책으로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단계별 확대
 - 3세대 가족구성원에 대한 우대정책은 일시적으로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와 노인복지 정책에 해당하는 관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 우선확대 대상기관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여성복지 정책기관으로 여성복지 및 보건복지
 - 자녀출산에 따른 교육부문 정책으로 교육부
 - 노인복지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대상이 가능합니다.
-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 콘텐츠
 - 출산장려금을 포함 동일세대 노인세대 돌봄서비스 지원정책 지원정책 병행
 - 아동 유아원 및 유치원 교육장려금 지원시 동일세대 노인세대 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정책 병행
 - 동거가족으로 노인부양 및 동거기준 가족에게 노인복지 정책 확대지원
 - 저출산 및 노인복지 관련기관 사회복지 정책에 3세대 동거가족 우선지원
 - 3세대 동거가족의 경제활동 세대로서 부모세대에 대한 우대정책 확대
 - 기타 신규 아파트 입주우선권, 주택구입시 자금대출 우선권 등 3세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활동 전반에 우대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산생활 및 사회생활에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우대정책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 제도적 장치마련
 - 관련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3세대 동거가족 기존 지원정책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제한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더불어 가족구성원에서 대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노인복지 고령화 문제의 실질적 대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해소정책
 - 3세대 동거가족의 우대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와 고령화 세대에 대한 가정복지 확대를 통하여 시대적 문제점
- 해소정책의 효율적 수행
 - 정부 사회복지 정책의 통합시스템 구축
 - 저출산 문제와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정 복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와 가족 간의 통합적 복지정책 수행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 정책구축
- 3세대 동거가족의 우대정책 법제화
 - 중,장기적 미래 비전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효율적 노인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 각부처별 통합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 법제화 추진
- 전통적 가족제도의 복원
 -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인 3세대 동거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정부 사회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
- 정부의 저출산,노인복지 지원예산 효율화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예산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족중심 가정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예산절감과 가족단위 중심 통합지원정책 활성화 기여

기타/못한 얘기들

- 현대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사라져가는 가족가치의 복원을 통하여 사회전반에 표출되는 청소년 범죄와 패륜범죄, 가정폭력 등 치유가 가능합니다.

- 정부에서 세대공감 3세대 동거가족을 적극 장려하고 가족문화 정착에 제도적 지원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면 중, 장기적으로 우리 고유 전통문화인 가족문화의 복원과 확산이 가능합니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

제안자

기관명: 광주광역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한태
연락처: 062-613-2272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저출산·청년인구유출로 2014년 이후 광주인구 지속적인 감소 추세
 - 2019년 대비 광주 출생아수 8,377명(감소율 -5.9%), 청년인구유출(2,592명) 등
- 광주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47.7%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음
 - 갑작스러운 자녀의 입원,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야간근무, 응급진료 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에 따른 양육부담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
- 생애주기별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분산 추진으로 조정·통합할 수 있는 조직 미비
 - 중앙부처별, 관련 기관별 다양한 청년출발·결혼·임신·출산·보육 등 돌봄서비스 분산 추진

제안내용

- 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시리즈 발표
 - 【정책시리즈 I】 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등('19. 8.)
 - 【정책시리즈 II】 촘촘한 생활거점 돌봄 인프라 구축('19. 12.)
 - 【정책시리즈 III】 청년출발지원 및 일·생활균형 지원 등('20. 상반기)
- ② 통합적·체계적 저출산 대응을 위한 광주형 돌봄추진체계 구축
- ③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광역지자체 최초 돌봄서비스 제공
- ④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를 통한 마을돌봄 환경 조성

기대효과

- 생애주기별 돌봄 관련 거점기관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 돌봄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극대화
-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돌봄부담 완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 생애주기별 통합 플랫폼 구축, 콘트롤 타워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시민들의 돌봄행정 만족도 제고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늘 행복 프로젝트

제안자

기관명: 광산구
담당자: 이지영

부서명: 복지정책과
연락처: 062-960-3916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최초 사회주택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마련의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고 출발 하였으나,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단절로 도심 속 슬럼화 고착 추세
 -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영구임대아파트 규모로 가장 큰 규모(3,384세대)
- 광산구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우산동 영구임대주택 전수조사 결과 생활고, 사회적 배제, 만성질환, 노후 주거시설 등 문제점 도출
 - 복지서비스 공급대비 주민 체감도는 낮아 기존 복지사업의 재평가 및 개인별 욕구에 따른 효율적인 서비스 설계 · 제공 필요 (2019. 광산구 영구임대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제안내용

- 사업내용 : 영구임대 아파트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5대 영역)
 - 의료. 돌봄. 주거. 일자리. 건강한 공동체 5대 사업 추진
 - ▶ 늘행복 주치의 : 마을주치의센터운영(건강상담 및 돌봄연계/의료사회협동조합 육성)
 - ▶ 늘행복 돌봄센터 :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스템 구축(노인맞춤형 돌봄, 틈새돌봄)
 - ▶ 늘행복 일터 : 주민참여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작업장, 단지내 공익형 일자리 창출
 - ▶ 늘행복 하우스 : 노인 · 장애인 등 케어안심주택 모델화(LH협력)
 - ▶ 늘행복 공동체 : 독거 중장년을 위한 마을 활력소, 사회활동참여 촉진 건강공동체 육성

기대효과

- 공간(섹터)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마을형 커뮤니티케어 완성

A형간염항체 무료검사 및 무료접종 추진

제안자

기관명: 무주군 보건의료원
담당자: 차선숙

부서명: 의료지원과
연락처: 063-320-8331

응모분야

기타 (A형간염항체 무료검사 및 무료접종)

제안배경

- 최근 전국적으로 A형간염 발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구감염이나 직접 접촉만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는 전염률이 높은 질병으로 A형간염 항체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질병을 사전예방하고, 발병률을 줄이고자 함.

- 대상 : 20~40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 밀접 접촉자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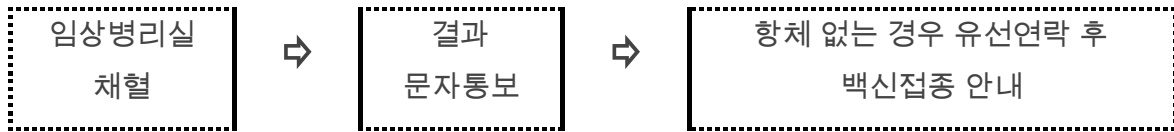
※ A형 간염 : 30~40대에서 73.3% 발생

- 최근 5년간 A형간염 발생현황 (단위: 명)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전국 | 1,804 | 4,679 | 4,419 | 2,437 | 17,626 |

제안내용

- 접종대상 : 무료접종 대상 확대(고위험군 → 전 국민)
- 40세 미만에서는 항체 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에서는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 접종
- 접종방법 : 2회 접종(6 ~ 12개월)
- 검사항목 : IgG A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
* 무주군 추진현황 : A형간염 바이러스 무료항체검사(지자체 자체 지원), 고위험군 무료접종(질병관리본부)
- 검사방법 및 절차



기대효과

-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 백신접종을 권고하여, A형간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A형간염 발생률을 감소하도록 함

민방위 스마트 교육 추진

제안자

기관명: 광주 북구
담당자: 이해숙

부서명: 안전총괄과
연락처: 062-410-6739

응모분야

디지털 개방

제안배경

- 민방위 종이통지서 교부에 따른 통대장 고충발생과 효율성 저하
- 생업 등으로 인한 비상소집훈련 참석의 부담 증가 등 민방위 교육의 효율화 필요

제안내용

-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서비스
 - 휴대폰을 통한 민방위 전자통지서 교부 및 수령
 - 민방위교육장에서 QR코드를 태그하여 입·퇴장 출결처리
-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 24시간 서버접속 후 수강(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기대효과

- 민방위 전자통지시스템 운영으로 대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지서 수령이 가능하고 종이통지서 교부 및 관리에 소모되는 행정력 경감
- 통지서 발송이력 및 출결현황 전산관리를 통한 효율성 증대
- 생계문제로 응소가 어려운 대원들의 생업부담 해소 및 기회비용 최소화
- 전국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교육사이트로 교육 참여 증가와 비상소집훈련 진행 및 관리에 소모되는 행정력 경감
- 실생활에 유익한 재난재해, 응급처치 등의 영상시청으로 민방위교육 내실화

제안 관련 협의체

계획안 관련 ① 민관협의체 또는 ②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 조직 존재 여부

없음 있음 (협의체 또는 위원회 명칭 :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안이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내용 :)

농지의 실효적 관리를 통한 농업인 삶의 향상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 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 농지과, 식량산업과)

제안배경

(배경)

-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농지법 규정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는 '주말농장' 제도가 도입되어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000㎡(약300평) 미만의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다.”
-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로 하나 실질적으로 농지에 대한 관리의 부재
- 도시거주인이 소규모 농지 소유의 허용으로 이를 전원주택 등 투기목적으로 악용에 대한 대책의 부재
-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기반 정보(농경지 지도)의 부재
- 매년 농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농작물의 수요/공급 예측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땀흘려 경작한 농작물의 폐기 사례가 매년 발생

(목적)

- 농지의 실질적 데이터 구축(농경지전자지도)을 통하여 농지의 부정이용 및 이용실태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농업정책 수립으로 농업인의 삶의 향상 도모 및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

제안내용

-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에 대한 농경지전지도 구축
 - 현행 부분적인 농지 관리체계를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의 관리가 가능한 농경지전자지도의 구축
- 국토부의 수치지형도 갱신 주기에 준하는 농경지전자지도 현행화 기반 마련
- 실질적인 농경지전자지도 기반의 작물 재배 정보 구축
- 농경지전지도 기반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체계 마련
- 농경지전지도 기반의 농지부정이용점검 지원 체계 마련

기대효과

- 농지의 실질적이며, 체계적 관리를 통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농지의 부정이용(투기목적 소유 등) 방지
- 실효적 농경지전자지도 기반의 농업정책 수행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업인의 삶의 향상에 기여
-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토의 난 개발 방지에 기여

지역 재생에너지(축산분뇨)를 활용한 분권형 에너지소비 기반 구축

제안자

기관명: 경북도청
담당자: 예봉해

부서명: 축산정책과
연락처: 054-880-3421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제안배경

- 정부, '17. 12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추진중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 7%(16년) → 20%(30년)
 - 50MW 이상 발전사업자 '23년까지 총발전량의 10%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 축분은 재생에너지적 가치 있으나 경제성이 없어 사용량 미비
 - 선진국은 REC, FIT제도 등으로 축분 연료화 산업 이미 정착단계
 - * 가축분뇨법, 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법적근거 기 마련

제안내용

- 가축분뇨 에너지시설 경제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
 -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소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 2.0 신설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 제7조1항 및 별표2에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소발전 가중치 2.0 신설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3호 별표 1 바이오에너지 설비항목에 가축분뇨 고체연료 신설
 - 가축분뇨 활용 소규모 발전사업자(고체연료, 가스) 매전단가 안정성 확보
 - * 독일 EEG 제도 도입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 육성 도모
 - 축분 공동처리시설을 수질오염총량삭감시설에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지원범위 확대
 - * 현행 바이오가스 이외 축분고체연료 생산 시설도 지원항목에 추가

기대효과

- 가축분뇨 처리의 다양화로 축분처리 정책의 유연성 확보
 - 퇴. 액비화로 토양환원, 에너지화로 발전. 온수. 스팀 활용 등
- 축분 적정처리로 사회적비용 경감(수질오염, 악취, 토양 부영양화 등)
 - 악취민원(건) : ('14)2,838 → ('15)4,323 → ('17)6,112
- 축분 에너지화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0MW급 축분발전소 운영 시 고용유발효과 588여명, 생산유발효과 1,278억원, 지역경제 부양효과 101억원 기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인드를 위한 상시학습 혁신

응모분야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배경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를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상시학습 교육 개편

제안내용

- 형식적인 상시학습 필수시간이 너무 많은데 국민에게 봉사하는 시간,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상시학습 의무시간으로 할당할 것을 제안
- 전문가와의 회의보다는 힘없는 국민, 답답한 국민 등이 부처와 소통하고 싶으면 신청하고 그 중에 부서에서 선택한 사람과 장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임
- 부서별 단체로 1일 민원인 체험하기(민원인이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평균 몇번의 전화를 시도하게 되는지)
- 부서별 민원인 대응 컨설팅 교육
- 공무원의 섭리를 모르는 민원인 입장으로 역지사지할 수 있는 현장교육 개설

기대효과

역지사지를 통해 공무원의 민원인을 향한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국민 또한 이를 통해 만족도 향상

기타/못한 얘기들

민원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진 공공기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참여를 위해 국민신문고나 국민생각함, 정부혁신1번가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적극행정 규정도 제정하여 노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업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듣는 것, 글로서 규정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교육이라 생각하고, 구조적인 문제 및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

제안자

기관명: 중앙119구조본부
담당자: 소방교 오선택

부서명: 기획협력과
연락처: 053-712-1042

응모분야

반부패

제안배경

생활속 불공정 요인에 대한 개선

현행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관련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차해주고, 계약기간내 보증금과 월세를 받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연락을 끊은 채 두절이 될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당 계약을 해지(파기)하고 임차 건물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 일정한 행정절차(건물명도소송 강제집행)를 거치지 않으면 권리를 회수 할 수 없을뿐더러, 임차인의 소유물에 대한 보관료를 지불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안내용

현행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을 제안합니다.

기존 제도(명도소송시 30일 변론 기간 및 송달기간 가산 제도)에서 특수조건(기존 임차인 연락두절 및 회피에 대한 공중 가능)이 성립시에는 30일 변론기간을 15일로 단축하고, 송달기간 가산제도를 2회 송달 후 미 확인시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권원 발휘. 임차인의 고의적(악의적) 행위시 임차인의 소유물에 대한 보관료에 대한 원고 부담이 아닌 구상권 청구로 변경 제안 합니다.

기대효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사건 중 1심 법원 처리 건 수 1위가 명도소송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해당 권리를 빌려 쓰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분쟁중 하나이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게 과다한 나머지 임차인이

고의적인 연락두절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며, 연락두절시 권리회수기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다보니 임차인에게는 많은 손실이 있을뿐더러 성실신의에 따른 거래도 하기 어려울 실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가 개선 된다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상호간 성실 신의의 업무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

분류

함께하고 싶은 부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안전부

제안내용

남녀평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여 호주제도의 존재가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판결이 나와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호주제도 폐지 결과 제사주재자에 대한 논란이 사회에서 계속 야기되고 있음. 예를 들면 아내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간에 합의가 안된 경우 남편(부친)이 '제사주재자'가 되어야하는가 아니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 등

